

전략연구 2017-03

충남지역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krlee@cni.re.kr

연구 요약

1. 필요성과 목적

충남도는 2011년부터 3농혁신정책을 도정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해 추진해 오고 있다. 3농혁신정책은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추진해 온 충남도의 농정정책이다(충청남도, 2013). 그간 충남의 3농혁신정책은 농업·농촌정책의 중요성 부각과 패러다임의 전환, 3농혁신위원회와 3농대학을 통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도-시군-유관기관의 농정 협력네트워크 강화,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의 통합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이관률, 2014).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3농혁신정책을 통해서 충남의 농가소득이 증가하였는가라는 정책적 실효성 측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컨대 일부 지역정치권과 지역 언론 등에서는 201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결과(이하 농가경제조사)를 바탕으로 충남도의 평균 농가소득(3,472만원)이 전국 평균 농가소득(3,721만원) 보다 낮다는 지적과 함께 충남도의 농가소득이 전국 9개 도 중에서 7위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충청투데이, 2016. 5. 4).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충남도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3농혁신정책이 과연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3농혁신정책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지 못했다 혹은 3농혁신정책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농가소득은 전국 8개 도 중에서 7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질문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 즉 ① 충남도의 농가소득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이는 전국과 어떻게 다른가, ② 충남도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과 차이가 있는가, ③ 충남도의 농가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는 전국과 무엇이 다른가, ④ 충남도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농가소득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충남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이 충남과 전국으로 비교할 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충남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확대시키는 전략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반면 충남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절대규모가 1,500만원 이하로 매우 소규모가 본질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최근 10년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9개 지역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지난 10년간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의 경우 제주와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제주와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유사한 수준이다.

셋째,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충남은 전국과 달리 일반농가와 영농형태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반농가의 육성과 더불어 채소와 과수농가를 육성해야 하고, 화훼농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토지, 기계기구, 사육가축 등의 자산규모를 확대해 규모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고령화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확보와 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적 관점에서는 농업공적보조금이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집행방식의 전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지원 및 농촌사회에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

3. 정책제언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자산의 토지면적, 기계기구자산, 사육가축자산은 전국과 충남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아직 규모화가 되지 못해서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농업자산에 대한 규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전업/겸업의 여부는 농가소득의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국과 충남에서 동일한 결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30일 이상 농사 외의 일에 종사하는가를 가지고 가구를 구분하는 전업농가와 겸업농가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주업/부업에서는 전국 차원에서는 전문농가와 일반농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충남 차원에서는 전문농가만 유의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충남의 경우 3ha 미만이거나 농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중소농의 경우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충남의 경우 일반농가가 3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일반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정정책이 집중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연령과 성별은 전국과 충남 차원에서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4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에서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기적으로 고령화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40대를 중심으로 한 농업인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섯째, 영농형태는 전국과 충남의 추정결과가 다소 상이하였다. 전국 차원에서 볼 때, 과수, 채소, 축산, 2종겸업 농가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충남에서는 오직 기타농가만이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화훼농가는 오히려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충남의 경우 전국과 상이하게 논벼농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다 전략적으로 과수, 채소 등으로 재배품종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농가소득에 (-)의 영향을 미치는 화훼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농업공적보조금은 전국과 충남 차원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업공적보조금은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거나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의 농업공적보조금이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농업피해보상금은 전국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충남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업피해보상금은 자연재해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확실한 소득이기 때문에 농업기반 농가소득과 관련성을 확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을 적극적인 영농의지로 본다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재해보험가입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덟째, 사업외소득은 전국과 충남에서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업외소득의 증가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측면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농정에서 사업외소득을 향상시키는 위한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의 비중이 더 크다. 이런 현실적 조건을 고려할 때, 사업외소득은 농촌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농가는 농업이라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농촌사회에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농정정책의 중심이나 농정정책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 차

제1장 문제제기	1
제2장 개념정의와 선행연구의 고찰	5
1. 농가소득의 개념	5
2. 선행연구의 고찰	9
3. 농가소득 결정요인의 고찰	12
제3장 분석틀 설정과 분석자료	15
1. 분석틀의 설정	15
2. 분석자료 및 방법	18
3. 분석자료의 일반특성	21
제4장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와 결정요인분석	27
1.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	27
2. 농업기반 농가소득 결정요인의 변화	33
3.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분석	40
4. 정책적 제언	45
제5장 결론 및 한계	48
1. 연구의 요약	48
2. 한계 및 향후 과제	49
부 록	51
참고문헌	64

표 목 차

<표 1.1> 농가경제조사의 연도별 조사표본	3
<표 2.2> 농가소득의 구성	6
<표 2.3> 농가소득의 재분류	8
<표 3.1>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분석틀 설정	17
<표 3.2> 농가경제조사의 연도별 패널구성과 표본수	19
<표 3.3> 패널별 특성분석	22
<표 3.4> 농가경제조사의 패널 특성 분석	24
<표 3.5> 지역별 농가소득의 차이	26
<표 4.1> 우리나라의 농업기반 농가소득과 농업비기반 농가소득	28
<표 4.2> 충남의 농업기반 농가소득과 농업비기반 농가소득	30
<표 4.3> 지역별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차이분석	31
<표 4.4> 지역별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의 차이분석	32
<표 4.5> 전국 농업기반 농가소득 결정요인의 평균	34
<표 4.6> 전국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의 빈도	35
<표 4.7> 충남 농업기반 농가소득 결정요인의 평균	37
<표 4.8> 충남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의 빈도	39
<표 4.9> 전국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	41
<표 4.10> 충남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	44
<표 4.11> 분석결과의 종합	47



그림 목 차



<그림 2.1> 농가소득의 주요 연구내용	11
<그림 3.1>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21
<그림 3.2> 전국과 충남의 농가소득 변화추이	24
<그림 4.1> 우리나라의 농업기반 농가소득과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추이	28
<그림 4.2> 충남의 농업기반 농가소득과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추이	30

제1장 문제제기

농가소득에 관한 논의는 1950년대 후반부터 수행되어 온 오래된 주제인 동시에 농업정책에서 중요한 영역이다.¹⁾ 농가소득에 관한 기존 논의는 주로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지난 60여 년간 농가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들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²⁾ 이는 농가소득에 관한 논의가 농업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숙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한편 그간 농가소득에 관한 논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³⁾ 그런가 하면 농가소득을 논의함에 있어서 농가가 1년 동안 취득한 모든 소득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농업 이외의 소득도 함께 포함하여 논의하였다. 왜냐하면 농업외소득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외소득을 분해해 보면, 농업에 기반한 겸업소득과 농업과 무관한 사업외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농가소득을 연구하거나 농가소득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외소득을 농가소득에서 배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업외소득은 농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농가소득을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간주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충남도는 2011년부터 3농혁신정책을 도정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해 추진해 오고 있다.

-
- 1) 농가소득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는 구재서(1958)가 경북지역의 농가소득을 통해 농가경제 수지, 농가소득, 가계비 등의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한국농업경제학회 편저, 2008).
 - 2) 농가소득에 관한 연구의 경우는 2010년대에 들어서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3) 임재환에 이루어진 충남지역의 농업외소득전략은 지역적 차원에서 수행되었지만, 농가소득에 관한 지역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농혁신정책은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좋은 농어촌, 행복한 농어업인”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추진해 온 충남도의 농정정책이다(충청남도, 2013). 그간 충남의 3농혁신정책은 농업·농촌정책의 중요성 부각과 패러다임의 전환, 3농혁신위원회와 3농대학을 통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도-시군-유관기관의 농정 협력네트워크 강화, 농업정책과 농촌정책의 통합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이관률, 2014).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3농혁신정책을 통해서 충남의 농가소득이 증가하였는가라는 정책적 실효성 측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컨대 일부 지역정치권과 지역 언론 등에서는 201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결과(이하 농가경제조사)를 바탕으로 충남도의 평균 농가소득(3,472만원)이 전국 평균 농가소득(3,721만원) 보다 낮다는 지적과 함께 충남도의 농가소득이 전국 9개 도 중에서 7위라는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충청투데이, 2016. 5. 4).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충남도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3농혁신정책이 과연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사실 지역정치권과 언론보도에서 사용된 “농가경제조사” 보고는 전국의 농가 중에서 2,600 농가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이고, 이중 충남의 농가는 불과 250 농가이다. 즉 조사된 표본은 전국 1,088,542 농가의 0.25%에 해당하는 것이고, 충남 132,011농가의 0.22%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충남도의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 농가소득 보다 낮다는 주장과 충남도 농가소득이 전국 7위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별 농가소득의 평균차이를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할 경우 F값이 1.46, prob가 0.1684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표되는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농혁신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충남도가 지난 6년간 추진해 온 3농혁신정책을 통해 농가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규명할 수 있고, 그것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도 제기해 볼 수 있다. 만약 3농혁신정책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증가했다면, 3농혁신정책에 참여한 농가와 참여하지 않은 농가의 소득을 비교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앙집권적인 우리나라의 농정구조에서 3농혁신정책을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충남도의 3농혁신정책이 농가소득의 증대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해 봐야 할 것이다. 어떤 정책이 개별 농가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과연 그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3농혁신정책을 통해서 농가소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3농혁신의 정책성과평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표 1.1〉 농가경제조사의 연도별 조사표본

(단위: 호)

구분	전체	8차 패널			9차 패널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30,045	3,048	3,074	3,121	2,643	2,652
서울	81	10	10	10	8	9
부산	189	7	10	10	20	18
대구	245	19	20	19	26	28
인천	216	20	20	20	17	19
광주	172	20	19	20	14	14
대전	101	10	10	9	8	10
울산	221	20	19	18	18	20
경기	3,340	328	329	333	294	296
강원	3,042	332	325	338	261	257
충북	2,984	328	328	332	254	254
충남	3,539	348	353	364	318	318
전북	3,389	337	345	350	298	305
전남	3,796	374	380	378	340	347
경북	3,766	386	394	393	325	325
경남	3,276	339	344	354	296	287
제주	1,688	170	168	173	146	145
구분	9차 패널			10차 패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2,649	2,637	2,674	2,347	2,600	2,600
서울	5	10	10	3	3	3
부산	20	17	19	22	23	23
대구	29	28	29	15	16	16
인천	19	19	20	20	21	21
광주	15	15	14	13	14	14
대전	10	8	10	6	10	10
울산	18	16	20	22	25	25
경기	292	299	302	275	296	296
강원	265	263	258	237	253	253
충북	252	244	255	234	253	250
충남	317	313	317	278	305	308
전북	299	303	304	268	290	290
전남	338	341	348	286	332	332
경북	329	326	326	294	334	334
경남	294	288	293	237	272	272
제주	147	147	149	137	153	153

자료: 농가경제조사(각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농혁신정책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지 못했다 혹은 3농혁신정책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농가소득은 전국 8개 도 중에서 7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실태 파악과 원인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질문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 즉 ① 충남도의 농가소득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이는 전국과 어떻게 다른가, ② 충남도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과 차이가 있는가, ③ 충남도의 농가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는 전국과 무엇이 다른가, ④ 충남도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농가소득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충남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충남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제2장 개념정의와 선행연구의 고찰

1. 농가소득의 개념

농가소득은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고, 아주 단순한 개념이어서 그런지 기존 선행연구에서 정확한 개념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농가소득(farm income)이란 1년 동안 농가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총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가경제 동향과 농업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195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농가경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가경제조사의 주요내용이 바로 농가소득이다. 이 조사의 조사대상인 농가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가를 10a 이상의 경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으로 농업을 계속하거나, 12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농가는 연간 10a 이상의 경지 경작, 120만원 이상의 가축사육, 120만원 이상의 농축산물 판매액이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가소득을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선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농가의 당해 연도 농업생산활동의 최종성과이며, 투입된 생산요소에 대한 총보수를 의미한다. 이 농업소득은 농작물소득과 축산물소득, 농업잡소득으로 구성이 된다. 둘째, 농업외소득은 농가가 농업 이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로서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으로 구성이 된다. 여기서 겸업소득은 농가가 농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으로써 임업 및 어업소득, 제조업소득, 건설업 소득, 기타겸업 소득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업외소득은 농가가 사업 외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써 노임, 급료 등의 임금소득과 임대료, 배당이자 등의 자본소득을 의미한다. 셋째, 이전소득은 농가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써,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공적보조금은 다시 농업공적보조금과 기타공적보조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끝으로 비경상소득은 경조수입, 사고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또는 타 가구로부터 얻은 수입을 의미한다.

〈표 2.2〉 농가소득의 구성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농업기반여부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작물소득	-	y
		축산물소득	-	y
		농업잡소득	농업피해보상금	
			기타소득	y
	농업외소득	겸업소득	임업 및 어업 소득	y
			제조업 소득	y
			건설업 소득	y
			기타겸업 소득	y
		사업외소득	근로소득	
			자본소득	
	이전소득	공적보조금	농업공적보조금	
			기타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	-	
	비경상소득	-	-	

그간 우리는 농가소득을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이해를 해왔고, 선행연구에서도 거의 유사한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이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농가소득(farm income)과 농가 밖 소득(off-farm income)이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있다(Wikipedia, 2016). 여기서 농가소득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고, 농가 밖 소득은 비농업적 활동을 통해 발생

하는 임금과 연금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지정한 바와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농가소득을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신용도(2006)과 오내원 외(2013), 권오상 외(2013a), 권오상 외(2013b) 등은 농가소득을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의 합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은 농가의 비경제적 활동 및 우발적 사건을 통해서 얻어진 소득으로 보고, 농가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신용도, 2006).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농가소득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우리가 농가소득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은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가소득의 조사대상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영농행위를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농가소득은 농업에 의해 창출되는 가구 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모두 농가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세부소득이 진정한 의미에서 농가소득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첫째, 농업소득은 농가가 농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마땅할 것이다. 다만 농업잠소득 중 중 농업피해보상금은 농작물 재해라는 우발적 사건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겸업소득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6차산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 바로 겸업소득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외소득은 농업과 전혀 관계없이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포함될 수 없다. 실제 미국의 경우에도 사업외소득은 농장 밖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기 기존 선행연구에서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농업외소득 전체를 농가소득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지정한 바와 같이, 비경제적 활동 및 우발적 사건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농가소득은 농업피해보상금을 제외한 농업소득과 겸업소득의 합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농가소득을 계상하게 되면, 농가가 1년 동안 농업을 기반으로 취득하는 총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농가소득과 개념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별도로 “농업기반 농가소득”과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농업피해보상금을 제외한 농업소득과 겸업 소득의 합을 의미하고,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과 농업피해보상금의 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재분류를 하게 나면, 농업정책에서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농가소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된다.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당연히 농업정책의 관심영역일 것이다. 그러나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엄격한 의미에서 농업정책의 관심영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을 증진하자는 정책은 농업활동을 장려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내원 외(2013)의 연구에서는 농업소득의 결정요인과 농업외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정요인이 대조적인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즉 농업소득을 증진시키는 요인은 오히려 농업외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 것이다.

그럼으로 향후 농가소득의 기준과 같이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농업활동을 통해 가구가 취득하는 소득인 농업기반 농가소득으로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소득을 농업기반 농가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표 2.3〉 농가소득의 재분류

재분류	농가소득의 구성	기존 분류
농업기반 농가소득 (농업소득 + 겸업소득 - 농업피해보상금)	농업소득	농업소득
	겸업소득	농업외소득
농업비기반 농가소득 (사업외소득 + 이전소득 + 비경상소득 + 농업피해보상금)	사업외소득	
	공적보조금	이전소득
	사적보조금	
	비경상소득	비경상소득

2. 선행연구의 고찰

1) 연구동향

선행연구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한국학술정보(KISS)와 누리미디어(DBpia)에서 농가소득을 관한 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40편이 검색되었다. 농가소득에 관한 연구를 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1970년대에 4편, 1980년대 3편, 1990년대 3편, 2000년대에 13편, 2010년대 17편이다. 따라서 농가소득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1953년에 시작한 농가경제조사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국화·체계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00년대 접어들면서 농가소득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농가소득에 관한 기존 연구를 연대별로 그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 농가소득과 관련된 연구는 농가소득의 중요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문팔용(1978)과 최양부(1978), 그리고 김영식(1979), 김형화(1980)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 연구에서는 농가소득의 실태를 간략히 제시한 이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둘째, 1980년대 농가소득과 관련된 연구는 농가유형별로 농가소득의 구분해 분석하였고, 농가소득의 결정과 분배에 대한 계량적 접근을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김장호(1984), 이정환 외(1987), 김인숙 외(1990) 등의 연구는 농가소득과 관련된 현재 연구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셋째, 1990년대 농가소득과 관련된 연구는 농가소득과 쌀 재배면적(이태호, 2000), 농가소득의 불균등(이병기, 2000) 등으로 그 영역이 다양화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국가적 차원의 논의에서 충남을 사례로 농외소득개발전략(임재환, 1992) 등도 제시되었다. 1990년대 농가소득 관련 논의는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측면, 그리고 농가소득과 쌀, 농가소득 불균등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 2000년대 농가소득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에서 제기된 농가소득의 불균등 문제와 농가소득 변동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농가소득 불균등과 관련된 논의로는 도시가구와 농가의 소득불균등(안동환, 2004), 농가소득 불균등의 변화추이와 원인

분석(김성용, 2004a; 김성용, 2004b; 박준 외, 2005; 이은우, 2006;)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농가소득 변동과 결정요인(황의식, 2004; 황의식 외, 2005; 신용도, 2006; 권용대 외, 2006; 황의식 외, 2006)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외에 농가소득과 효율성(강상목 외, 2005), 농외소득활동과 농업노동공급 패턴(이명현, 2006), 직접지불제도와 소득지원정책의 효율성 분석(이용기, 2007) 등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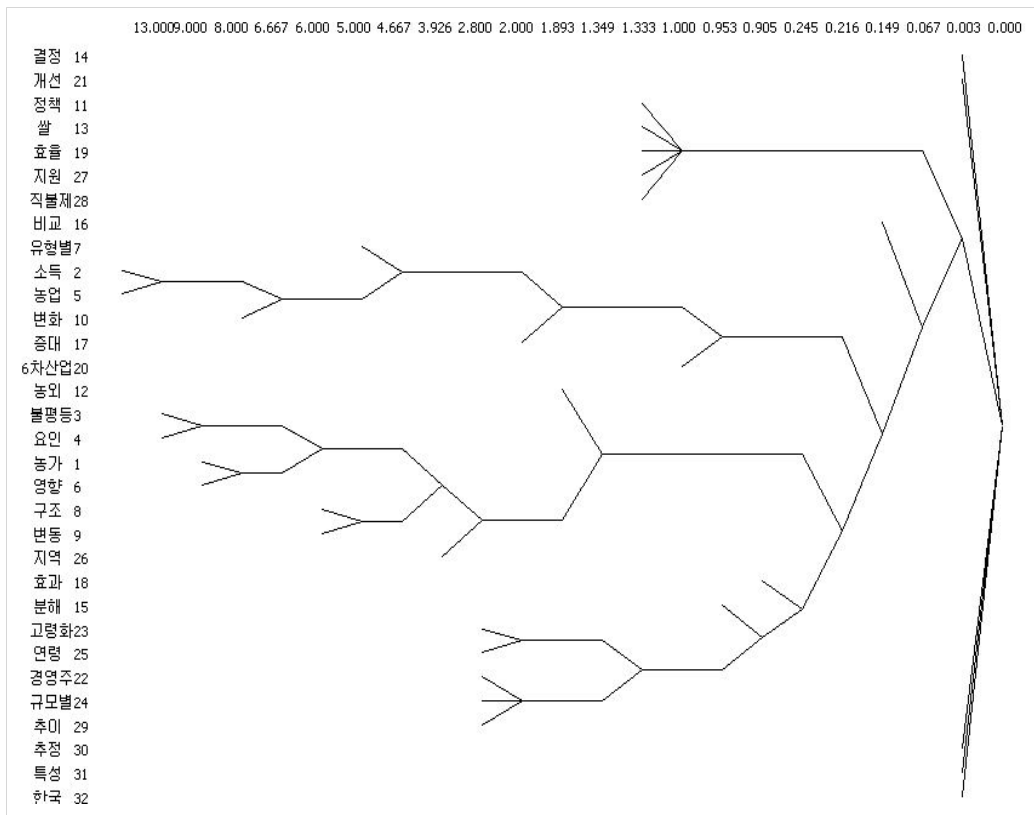
다섯째, 2010년대 농가소득과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의 논의와 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여전히 농가소득 불균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2010년대에 관련 논의에서는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우선 농가소득의 불평등과 관련된 논의는 김재경 외(2011), 김태이 외(2012), 윤영석 외(2013), 김규섭 외(2014) 등이 있다. 이들 논의가 기존 논의가 차이가 있다면, 농업 R&D 투자, 공적보조금, 고령화에 따른 농가소득 불균등을 접근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가소득 결정요인에 관해서는 다양한 독립변인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농업교육참여(강혜정 외, 2011), 고령화(정진화 외, 2013), 특정 품목(최철구 외, 2013; 전지연 외, 2016; 이해림 외, 2016), 농가유형별(민선형 외, 2015; 김미복, 2016), 지역특성(권오상 외, 2013), 6차산업화(박종훈 외, 2014; 황재희 외, 2016) 등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외에 농가소득의 이웃효과(권오상 외, 2013), 농가소득의 중장기 실태분석(오내원 외, 2013), 미국 신농업법의 농가소득지원정책(임정빈, 2014), 쌀 관세 유예화와 농가소득(이해림 외, 2016) 등이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농가소득과 관련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대부분 계량적 연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농가유형과 지역적 특성, 그리고 작물 등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등 연구의 관점이 세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농가소득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지역의 농가소득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2) 연구내용

선행연구의 동향에서 살펴본 농가소득 관련 40편의 논문의 제목을 통해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요 연구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의 연구제목에서 조사와

접속사 등을 제외한 명사를 중심으로 한 단어의 관계행렬을 작성하였고, 이 행렬을 이용해 선행연구의 주요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실제 분석에서는 사회네트워크 분석도구인 UCINET을 이용하였고, UCINET의 clique 분석을 통해 연구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농가소득의 선행연구가 주로 어떠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1) 농가소득의 주요 연구내용

농가소득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제목에서 사용된 총 단어수는 271개이고, 이중 중복된 단어를 제외하면 총 104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104개의 단어 중에서 농가와 소득이 각각 42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연구주제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농가와 소득을 제외한 단어 중에서는 불평등과 요인이 각각 9회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농업과 영향이 각각 8회, 유

형별이 7회, 구조와 변동이 각각 6회, 변화와 정책이 각각 5회, 농외와 쌀이 각각 4회, 결정, 분해, 비교, 증대, 효과, 효율이 각각 3회, 그리고 6차산업화, 개선, 경영주, 고령화, 규모별, 연령, 지역, 지원, 직불제, 추이, 추정, 특성, 한국이 각각 2회 사용되었다. 그 외 72개의 단어는 각 1회씩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가소득의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한 clique 분석결과에 의하면, 농가소득의 연구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된 연구내용은 농업소득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농업소득변화에 관한 연구는 유형별 농업소득변화와 농업소득증대방안 등으로 확장되어 있다. 그 다음의 연구내용은 농가소득의 불평등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불평등 요인에 관한 연구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 농가소득 불평등의 구조와 변동을 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고령화와 연령, 경영주와 규모별 등으로 농가소득이 어떻게 다른지를 규명하는 논의가 존재하고 있다. 끝으로 쌀과 관련하여 직불제의 지원정책이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논의가 마지막 연구내용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기존 농가소득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농가소득의 불평등에 집중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3. 농가소득 결정요인의 고찰

농가소득의 결정요인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선행연구는 강혜정 외(2011), 정진화 외(2013), 권오상 외(2013a), 권오상 외(2013b)만이 유일하다. 선행연구의 동향에서 언급된 다수의 연구들은 농가소득을 주요 주제로 하기로 했지만, 실제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 농가소득 결정요인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강혜정 외(2011)는 농업교육 참여에 따른 농가소득 증가율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농업교육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으로서는 영농경력, 정규교육수준, 영농교육시간, 영농형태(과수농가, 채소농가, 특작농가, 축산농가, 기타농가)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영농교육시간과 채소농가, 축산농가의 농가소득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농업교육에 참여한 농가의 농가소득 증가

율이 평균 17.54%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농가경제조사에서 나타난 농가소득 증가율 4.2%보다 높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농가소득의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행한 표본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둘째, 정진화 외(2013)는 농가의 고령화가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농가경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고령화와 농가소득의 요인분해를 통해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과 고령화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령화가 될수록 농가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농가소득과 연령의 단편적 관계만을 고려했다는 한계가 있다.

권오상 외(2013)는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가소득을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의 합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농가단위에서는 농가유형(전문, 부업, 자급농가), 영농형태(과수, 특작, 화훼, 전작, 축산, 기타, 2종겸업), 경지규모,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족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지역단위에서는 시군구별 5년간 인구변동율, 농가호당 경지면적, 농가인구비율, 농가호당 경지면적, 전업농비율, 영농형태별 비율, 친환경농업 농가비율, 컴퓨터 보유농가 비율, 자동차 보유비율, 제조업 매출액, 서비스업 매출액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농업소득은 호당 평균경지면적과 전업농 비율이 (+)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농업외소득에는 인구성장률과 같은 도시화 진행속도가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외소득에는 겸업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외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외소득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권오상 외(2013b)는 농가경제조사자료를 활용해 농가소득에 있어 이웃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권오상 외(2013a)와 유사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다만 권오상 외(2013a)의 지역단위 변수를 수정하여 인구증가율, 농가인구비율, 호당경지면적, 전업농비율, 친환경농가비율, 컴퓨터 보급률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소득의 결정요인과 농업외소득의 결정요인이 다르게 추정되고 있다는 것과 농업외소득은 인구증가율이 높을수록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웃효과는 농업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농가소득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했던 간에 비농업분야의 사업외소득, 즉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은 농업적 특성만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 사업외소득과 같은 비농업 분야의 소득이 농가소득에 포함된다면, 사업외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도시화율, 일자리수, 근로시간,

노동숙련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농가소득의 범주와 무관하게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이 적용되었다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권오상 외(2013a)의 결과에서 농업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농업외소득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 결정요인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농가소득을 농업에 기반한 소득과 농업에 기반하지 않은 소득으로 구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농가소득에 비농업적 측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에는 농업적 특성 변수만 활용한 문제점도 있다. 아울러 농가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써, 정책 및 제도적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측면도 지적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을 농업기반 농가소득으로 한정하고,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으로 농업자산, 영농형태, 가구특성, 그리고 농업공적보조금, 농업피해보상금, 사업외소득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중 농업자산과 농업공적보조금, 농업피해보상금 등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요인이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한 한계를 극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 차원과 충남적 차원으로 구분해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이후, 국가 차원의 분석결과와 충남 차원의 분석결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 분석틀 설정과 분석자료

1. 분석틀의 설정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가소득을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설정하는 것은 농업정책을 제시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농가소득을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농업외소득에는 비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은 미국의 분류 기준에 의거할 때, 농가 밖 소득(off-farm income)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소득을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농업피해보상금을 제외한 농업소득과 겸업소득의 합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존 용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농업기반 농가소득”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정책적 변수를 추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자산이다. 농업자산은 크게 토지면적과 기계기구자산, 그리고 사육가축자산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들 농업자산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투입요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업자산이 많다는 것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신용도, 2006). 이 결정요인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한 변인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제한적으로 토지면적만을 사용했을 뿐이다.

둘째, 전업/겸업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전업농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30일간 농사 이외의 일

에 종사하는 가구원이 없는 농가이고, 겸업농가는 30일간 농사 이외의 일을 종사하는 가구원이 있는 농가이다. 따라서 전업농가는 겸업농가에 비해서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겸업농가의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변수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결정요인이다.

셋째, 주업/부업형태이다. 주업/부업형태에 따라 전문농가, 일반농가, 부업농가, 자급농가로 구분이 된다. 우선 전문농가는 농업소득이 농업외소득보다 많고 경지규모가 30ha 이상 또는 농업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농가이고, 일반농가는 농업소득이 농업외소득보다 많고 경지규모가 3ha 미만이거나 농업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농가이다. 그리고 부업농가는 30a 이상 혹은 농업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 농업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농가이고, 자급농가는 30a 미만인 농가 중 농업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이다. 따라서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전문농가가 가장 높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일반농가, 부업농가, 자급농가의 순으로 될 것이다.

넷째, 연령과 성별이다. 이 두 변수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반드시 포함된 결정요인이다. 기본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정진화 외, 2013). 그리고 성별과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일수록 소득이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사업외소득을 포함했기 때문에 성별이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건지는 확신하기 곤란하다.

다섯째, 영농형태이다. 영농형태는 농가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논벼농가, 과수농가, 채소농가, 특작농가, 화훼농가, 전작농가, 축산농가, 기타농가, 2종겸업농가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 동안 벼 재배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논벼농가에 비해서 다른 작물재배농가는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여섯째, 농업공적보조금이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농업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매년 일정규모의 농업공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농업공적보조금이 당초 정책목적에 따른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결정요인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결정요인으로 다루지 못한 변수이다.

일곱째, 농업피해보상금이다. 농업피해보상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금이다. 농업피해보상금은 자부담 비율이 작물종류에 따라 20~50%로 상이하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농가의 적극적이 영농의지를 표현하지만, 실제

농업피해보상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기 때문에 농업피해보상금이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정확히 추정하기 곤란하다. 이 변수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지 고려하지 않았던 결정요인이다.

〈표 3.1〉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분석틀 설정

구분	세부변수		단위	추정방향
종속 변수	농업기반 농가소득(농업소득+겸업소득-농업피해보상금)		만원	
독립 변수	농업자산	토지면적	m ²	+
		기계기구자산	만원	+
		사육가축자산	만원	+
	농가특성	전업/겸업(기준 겸업)	명목	+
		주업/부업(기준 자급농가)	명목	+
		경영주연령(기준 60세 이상)	명목	+
		경영주성별(기준 여자)	명목	?
	영농행태	논벼농가(기준)	명목	
		과수농가		+
		채소농가		+
		특작농가		+
		화훼농가		+
		전작농가		+
		축산농가		+
		기타농가		+
		2종겸업		+
	농업공적보조금	농업보조금+기타농업보조금	만원	?
	농업피해보상금	농업피해보상금	만원	?
	사업외소득	사업외소득	만원	?

여덟째, 사업외소득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사업외소득은 농가소득에 포함되었던 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농업기반 농가소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사업외소득이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사업외소득이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정확히 추정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사업외소득과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독립적 관계, 긍정적 관계, 부정적 관계를 모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농업정책에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외소득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농업외소득을 증진하는 농업정책이 정당한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유일한 자료는 농가경제조사이다. 농가경제조사는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53년 이후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953년부터 1992년까지는 국가단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93년부터는 지역별로 표본을 할당하고, 매년 표본수도 3,140 농가로 증대하여 지역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농가경제조사는 1953~1998년까지 7차에 걸친 표본개편이 이루어졌고, 2003년에 8차, 2008년에 9차, 2013년에 10차의 표본개편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추이, 지역별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차이분석,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분석을 수행하고자 하고자 한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자료가 지역별로 구축되어 있는 농가경제조사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농가경제조사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한계가 있다. 최근 10년간 농가경제조사의 패널이 총 3회(8차~10차)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5년부터 2007년은 8차 패널이고, 2008년부터 2012년은 9차 패널,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은 10차 패널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10년을 통합해서 비교분석할 수 없고, 부득이 각 패널별로 구분을 해서 비교분석해야 할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각 패널별로 조사표본이 상이하기 때문에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모두 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추이와 지역별 차이는 최근 10년간을 대상으로 분석하도록 하지만,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은 데이터 특성을 감안하여 각 패널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즉 8차 패널에서는 2005년과 2007년의 데이터를 통합해 사용하고, 9차 패널에서는 2008년과 2012년의 데이터를, 그리고 제10차 패널에서는 2013년과 2015년의 데이터를

통합해 패널데이터를 구축해 각각 별도로 분석하도록 한다.

한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데이터의 경우 현재 세종시가 충남 연기군으로 분류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충남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종시로 조사되고 있다.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5년의 세종시 자료는 충남에 포함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이는 2005년~2014년까지 세종시가 충남에 포함되었다는 측면, 그리고 세종시의 표본이 불과 19호에 불과하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표 3.2〉 농가경제조사의 연도별 패널구성과 표본수

(단위: 호)

구분	연도	전국(n=30,045)	충남(n=3,520)	분석대상
제8차 패널	2005	3,048	348	○
	2006	3,074	353	
	2007	3,121	364	○
제9차 패널	2008	2,643	318	○
	2009	2,652	318	
	2010	2,649	317	
	2011	2,637	313	
	2012	2,674	317	○
제10차 패널	2013	2,347	278	○
	2014	2,600	305	
	2015	2,600	308	○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농가는 약 110만호 정도이다. 농가경제조사는 이 중에서 2,600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0.24%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의 적용이 요구될 뿐 아니라, 농가경제조사 자료가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통계량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통해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전국과 충남으로 구분해 비교함으로써, 향후 충남지역의 농업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최근 10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살펴본 이후, 충남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는 그래프분석을 통해 거시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별 차이분석은 각 연도별로 분산분석을 수행한다. 이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표본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9개의 도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지역별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서 각 패널별 시작연도와 마지막연도를 분석시점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들이 최근 10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정요인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국 차원과 충남 차원으로 구분하여 ANOVA와 χ^2 -test를 수행하였다. 이 분석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으로 작동하는 변수들이 그간 어떻게 변화되었고, 전국과 충남 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ANOVA의 사후검정으로는 duncan 검증을 수행하였다.

셋째,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의 분석은 설정된 분석틀에 따라 전국과 충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은 패널데이터의 특성을 감안해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분산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robust t값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각 패널별로 조사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에 패널별로 결정요인분석을 별도로 수행하고, 패널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비교검토를 수행하도록 한다.



[그림 3.1]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3. 분석자료의 일반특성

1) 패널별 특성분석

앞서 지정한 바와 같이, 농가경제조사는 2005년 이후 총 3번의 조사패널이 변경되었다. 조사패널 간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각 패널의 시작연도와 마지막 연도 기준으로 분산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재정의한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적용하게 될 경우, 패널의 차이를 정확히 규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부득이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 모두 합한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패널 간의 차이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는 농가소득의 향상이 패널의 변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패널 변화와 상관없는 것인지 규명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8차 패널의 마지막 연도인 2007년과 9차 패널의 시작연도인 2008년에는 농가소득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면 안 될 것이다. 이는 9차 패널의 마지막 연도인 2012년과 10차 패널의 시작연도인 201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동일 패널 내에서는 농가소득이 증가하거나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도 패널

구성의 적절성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산분석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볼 때, 8차 패널의 마지막 연도인 2007년의 농가 소득과 2008년의 농가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 2012년과 2013년의 농가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17.81$, $prob=0.0001$). 따라서 제10차 패널은 제9차 패널에 비해서 농가소득이 높은 농가가 추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전남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3.3〉 패널별 특성분석

(단위: 만원)

구분	8차 패널		9차 패널		10차 패널		F값	prob
	2005	2007	2008	2012	2013	2015		
전국	3,050.3 ^c	3,196.7 ^c	3,052.1 ^c	3,103.1 ^c	3,452.4 ^b	3,721.5 ^a	17.81	0.0001
경기	3,882.7	4,312.7	3,693.1	3,813.2	3,974.8	4,102.5	0.72	0.6057
강원	2,652.3 ^c	3,032.3 ^{bc}	3,282.0 ^{bc}	3,069.3 ^{bc}	3,492.1 ^{ab}	3,967.3 ^a	4.57	0.0004
충북	2,940.9 ^c	3,153.7 ^c	2,890.9 ^c	2,999.3 ^c	3,541.8 ^b	3,658.5 ^a	3.50	0.0037
충남	3,321.5	3,537.7	3,660.8	3,321.7	3,203.8	3,448.0	0.70	0.6250
전북	2,823.9 ^b	2,951.1 ^b	2,895.1 ^b	2,622.6 ^b	3,086.9 ^b	3,613.0 ^a	3.87	0.0017
전남	2,705.4 ^b	2,754.5 ^b	2,634.9 ^b	2,622.9 ^b	3,385.8 ^a	3,441.0 ^a	6.93	0.0001
경북	2,781.8 ^c	2,726.9 ^c	2,789.2 ^c	3,173.9 ^{bc}	3,489.4 ^b	3,822.2 ^a	8.53	0.0001
경남	2,707.9 ^{bc}	2,909.3 ^c	2,518.8 ^c	2,774.8 ^{bc}	2,994.6 ^b	3,459.7 ^a	4.59	0.0004
제주	4,481.9	4,118.9	3,767.2	3,916.7	4,164.0	4,381.1	0.78	0.5608

한편 강원과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은 2012년과 2013년의 농가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사하기도 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4개 지역의 경우 2012년과 2013년의 조사대상이 약간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경기와 충남,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는 2007년과 2008년,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의 농가소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4개 시도의 경우는 2회에 걸친 패널 변경에서 농가소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8차 패널과 9차 패널의 변경에 따른 농가소득의 차이는 없지만, 10차 패널은 9차 패널에 비해서 농가소득이 높은 농가가 추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전국과 전남의 경우에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도 경기와 충남,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10차 패널이 9차 패널에 비해서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패널의 변화시점인 2007년과 2008년,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의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차이를 전국 차원과 충남 차원으로 구분해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차원에서 볼 때, 2007년과 2008년의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런데 2012년과 2013년에는 패널에 따른 농가소득의 차이가 있다($F=7.75$, $prob=0.0001$). 그리고 농업소득을 제외한 농업외소득($F=33.09$, $prob=0.0001$)과 비경상소득($F=34.97$, $prob=0.0001$)의 경우도 패널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전소득은 2012년과 2013년의 값이 양쪽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볼 때, 10차 패널은 9차 패널에 비해서 농업외소득과 비경상소득이 높고, 그 결과 농가소득 자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남 차원에서 볼 때, 패널 변화에 따른 전국의 농가소득 변화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7년과 2008년, 그리고 2012년과 2013년 충남의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은 패널의 변화에 따른 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국 패널의 변화가 충남지역에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에서도 전혀 통계적 차이가 없다는 것은 충남의 패널 성향이 전국 및 다른 지역의 패널 성향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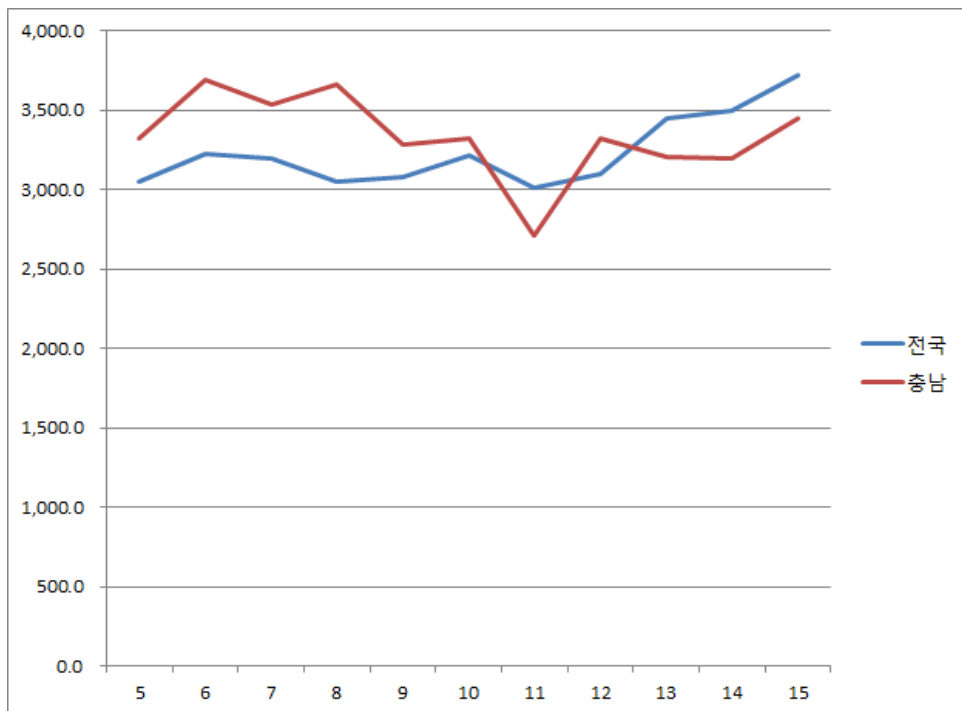
이러한 차이점은 전국과 충남의 농가소득 변화추이를 나타낸 [그림 3.2]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충남의 농가소득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경향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2013년 제10차 패널로 변화된 이후로는 충남의 농가소득이 전국 평균 보다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2011년 충남의 농가소득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충남의 농가소득은 제10차 패널 변경 시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고려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4〉 농가경제조사의 패널 특성 분석

(단위: 만원)

구분		2007	2008	2012	2013	F값	prob
전국	농가소득	3,196.7 ^b	3,052.1 ^b	3,103.1 ^b	3,452.4 ^a	7.75	0.0001
	농업소득	1,040.6	965.3	912.7	1,003.5	1.36	0.2543
	농업외소득	1,109.7 ^c	1,135.2 ^c	1,358.6 ^b	1,570.5 ^a	33.09	0.0001
	이전소득	495.9 ^c	528.9 ^{bc}	561.4 ^{ab}	584.4 ^a	8.25	0.0001
	비경상소득	550.6 ^c	422.6 ^c	270.5 ^b	294.0 ^a	34.97	0.0001
충남	농가소득	3,537.7	3,660.8	3,321.7	3,203.8	0.96	0.4131
	농업소득	1,098.2	1,314.0	1,190.2	848.6	1.37	0.2507
	농업외소득	1,100.0	1,240.2	1,259.9	1,481.7	2.49	0.0588
	이전소득	556.0	581.2	524.4	572.9	0.38	0.7657
	비경상소득	783.6	525.3	347.2	300.6	6.90	0.0001

(단위: 만원)



〔그림 3.2〕 전국과 충남의 농가소득 변화추이

2) 지역별 특성분석

농가소득의 지역별 차이분석은 서울을 비롯한 7개의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9개의 도 광역자치단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농가경제조사의 표본이 최대 30농가를 넘지 않기 때문에 표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분석분석을 통한 농가경제조사의 농가소득에 대한 지역별 차이분석을 살펴보면 <표 3.5>와 같다.

첫째,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제주의 농가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가 높게 나타났다. 3번째로 농가소득이 높은 지역은 충남과 충북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지역은 농가소득이 모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북은 가장 낮은 농가소득의 지역과도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3.05$, $prob=0.0001$).

둘째, 2007년의 경우에는 제주와 경기도의 농가소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 충남, 충북, 강원, 전북이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지역은 가장 낮은 농가소득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충북, 강원, 전북은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과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9.82$, $prob=0.0001$).

셋째, 2008년에는 제주와 경기 이외에도 충남과 강원이 농가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번째로 농가소득이 높은 지역은 충북, 전북, 경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농가소득은 강원의 농가소득과 통계적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과 경남으로 나타났는데, 2번째로 집단의 충북, 전북, 경북과 통계적 차이가 없다($F=8.02$, $prob=0.0001$).

넷째, 2012년에는 제주, 경기, 충남의 농가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북의 농가소득이 높게 나타났는데, 경기와 충남의 농가소득과는 통계적 차이가 없다. 그 외 지역의 가장 농가소득이 낮게 나타났지만, 이들 지역 또한 충남과 경북과는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4.17$, $prob=0.0001$).

다섯째, 2013년에는 제주와 경기, 강원, 충북, 경북의 농가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남의 농가소득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남의 농가소득은 경기, 강원, 충북, 경북과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의 농가소득이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이들 지역 또한 강원, 충북, 전남, 등과 농가소득의 통계적 차이가 없다($F=2.75$, $prob=0.0051$).

여섯째, 2015년의 경우에는 9개 지역별로 농가소득의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51, prob=0.1499). 따라서 특정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가소득이 높다 혹은 낮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2005년과 2007년까지는 제주와 경기 등 특정 지역의 농가소득이 높다고 할 수 있었지만, 2012년 이후에는 제주와 경기와 유사한 농가소득을 보이는 지역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였고, 결국 2015년에는 지역별로 농가소득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5〉 지역별 농가소득의 차이

(단위: 만원)

구분	2005	2007	2008	2012	2013	2015
전국	3,050.3	3,196.7	3,052.1	3,103.1	3,452.4	3,721.5
경기	3,882.7 ^b	4,312.7 ^a	3,693.1 ^a	3,813.2 ^{ab}	3,974.8 ^{ab}	4,102.5
강원	2,652.3 ^d	3,032.3 ^{bc}	3,282.0 ^{ab}	3,069.3 ^c	3,492.1 ^{abc}	3,967.3
충북	2,940.9 ^{cd}	3,153.7 ^{bc}	2,890.9 ^{bc}	2,999.3 ^c	3,541.8 ^{abc}	3,658.5
충남	3,321.5 ^c	3,537.7 ^b	3,660.8 ^a	3,321.7 ^{abc}	3,203.8 ^c	3,448.0
전북	2,823.9 ^d	2,951.1 ^{bc}	2,895.1 ^{bc}	2,622.6 ^c	3,086.9 ^c	3,613.0
전남	2,705.4 ^d	2,754.5 ^c	2,634.9 ^c	2,622.9 ^c	3,385.8 ^{bc}	3,441.0
경북	2,781.8 ^d	2,726.9 ^c	2,789.2 ^{bc}	3,173.9 ^{bc}	3,489.4 ^{abc}	3,822.2
경남	2,707.9 ^d	2,909.3 ^{bc}	2,518.8 ^c	2,774.8 ^c	2,994.6 ^c	3,459.7
제주	4,481.9 ^a	4,118.9 ^a	3,767.2 ^a	3,916.7 ^a	4,164.0 ^a	4,381.1
F값	13.05	9.82	8.02	4.17	2.75	1.51
prob	0.0001	0.0001	0.0001	0.0001	0.0051	0.1499

제4장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와 결정요인분석

1.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

1) 전국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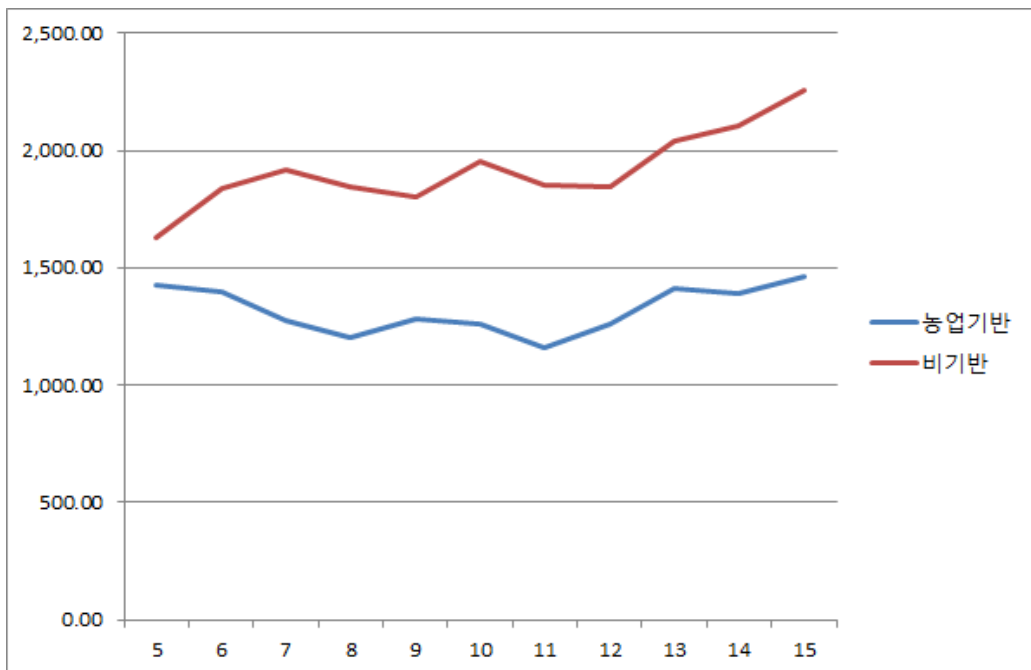
2015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1,464.5만원이고,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2,257.0만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농업소득이 전체 농가소득의 10%에 불과한 실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비중은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다만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절대규모가 낮은 문제가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1,423.3만원에서 시작하여 2011년에는 1,162.1만원까지 하락을 하였고, 그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5년에 1,464.5만원에 이르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지난 10년간 전혀 성장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농업기반 농가소득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5년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1,627.0만원에서 시작하여 약간의 증감과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2015년에는 2,257.0만원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표 4.1〉 우리나라의 농업기반 농가소득과 농업비기반 농가소득

(단위: 만원)

구분	농업기반 농가소득(a)	농업비기반 농가소득(b)	a/b
2005	1,423.3	1,627.0	0.87
2006	1,394.8	1,835.6	0.76
2007	1,278.3	1,918.4	0.67
2008	1,203.3	1,848.8	0.65
2009	1,282.6	1,798.8	0.71
2010	1,260.1	1,952.0	0.65
2011	1,162.1	1,852.7	0.63
2012	1,258.0	1,845.1	0.68
2013	1,414.7	2,037.7	0.69
2014	1,391.1	2,104.0	0.66
2015	1,464.5	2,257.0	0.65



〔그림 4.1〕 우리나라의 농업기반 농가소득과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추이

그 결과 농업비기반 농가소득 대비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비는 2005년에 0.87이었으나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에는 0.65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지난 농가에서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비중이 점점 낮아짐을 의미하는 동시에 농가에서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 충남 차원

2015년 현재 충남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1,318.5만원이고,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2,129.4만원이다. 따라서 충남의 농업기반 농가소득 또한 전국적 현상과 동일하게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충남 농가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1,564.8만원에서 시작하여 2011년에는 718.1만원까지 하락을 하였고, 그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5년에 1,318.5만원에 이르고 있다. 결국 충남의 농업기반 농가소득 또한 지난 10년간 전혀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2005년의 농가소득 보다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2005년 1,756.7만원에서 시작하여 2007년 2,258.7만원까지 상승하였고, 그 이후 2009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다시 회복하여 2015년 현재 2,129.4만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충남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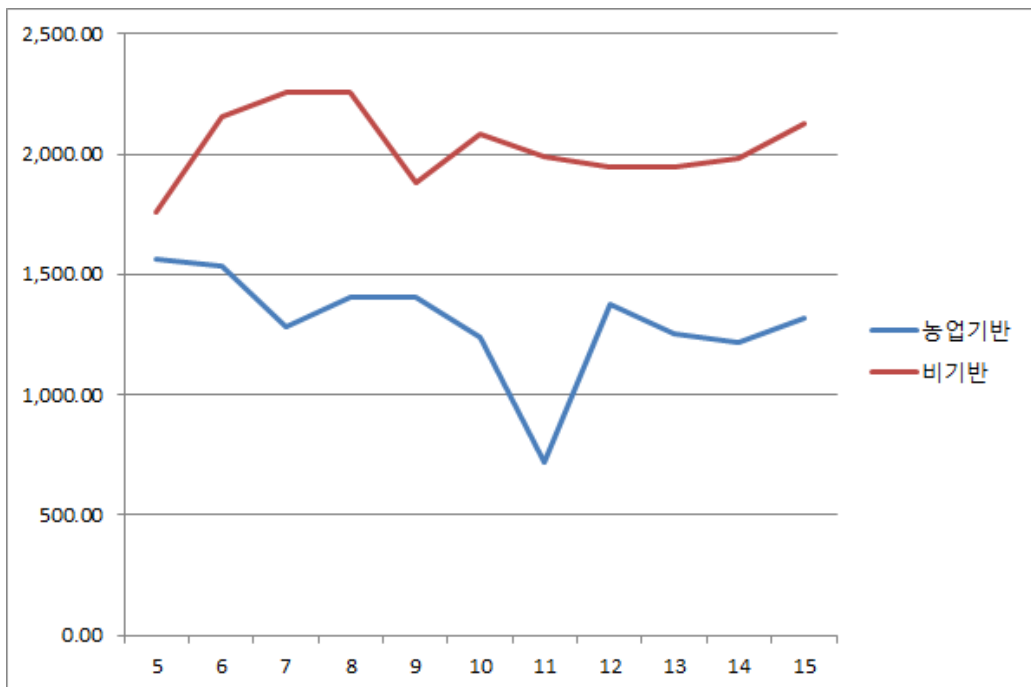
그 결과 농업비기반 농가소득 대비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비는 2005년에는 0.89였으나, 2011년에는 0.36까지 하락한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5년 현재 0.62에 이르고 있다. 충남의 농업기반 농가소득, 그리고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의 경향은 전국과 크게 상이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앞서 제기된 것과 같이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절대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이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현상이다. 그러나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규모가 연간 1,5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충남의 농가가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표 4.2〉 충남의 농업기반 농가소득과 농업비기반 농가소득

(단위: 만원)

구분	농업기반 농가소득(a)	농업비기반 농가소득(b)	a/b
2005	1,564.8	1,756.7	0.89
2006	1,536.4	2,153.3	0.71
2007	1,279.0	2,258.7	0.57
2008	1,406.1	2,254.7	0.62
2009	1,407.0	1,879.4	0.75
2010	1,238.5	2,083.5	0.59
2011	718.1	1,991.3	0.36
2012	1,377.5	1,944.2	0.71
2013	1,253.9	1,949.9	0.64
2014	1,214.3	1,979.0	0.61
2015	1,318.5	2,129.4	0.62



(그림 4.2) 충남의 농업기반 농가소득과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추이

3) 지역별 차이분석

그렇다면 충남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낮다면 어떤 지역이 더 높은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각 패널별 시작연도와 끝나는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기반 농가소득과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에 대한 지역별 차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2005년, 2007년, 2008년, 2012년, 2013년, 2015년의 6개 시점에서 모두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를 비롯한 9개 지역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모두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높다 혹은 낮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지역별 특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지역별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차이분석

(단위: 만원)

구분	2005	2007	2008	2012	2013	2015
전국	1,423.3	1,278.3	1,203.3	1,258.0	1,414.7	1,464.5
경기	1,394.9	1,405.8	1,219.3 ^b	1,339.3	1,334.9	1,308.0
강원	1,343.9	1,149.3	1,300.5 ^{ab}	1,085.5	1,395.0	1,387.9
충북	1,282.9	1,176.0	1,028.2 ^b	919.7	1,483.8	1,592.4
충남	1,564.8	1,279.0	1,406.1 ^{ab}	1,377.5	1,253.9	1,318.5
전북	1,421.3	1,287.1	1,216.1 ^b	1,122.5	1,285.6	1,334.7
전남	1,380.3	1,147.1	1,085.6 ^b	1,137.4	1,492.4	1,553.8
경북	1,491.4	1,270.4	1,394.3 ^{ab}	1,559.5	1,784.8	1,805.8
경남	1,277.8	1,258.5	943.2 ^b	1,048.0	1,104.1	1,333.3
제주	1,991.5	1,831.1	1,749.8 ^a	1,425.7	1,423.8	1,195.9
F값	1.64	1.18	1.93	1.23	1.62	0.98
prob	0.1094	0.3063	0.0513	0.2794	0.1144	0.4502

그러나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개 시점 모두에서 경기와 제주의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경기와 제주는 다른 7개 지역보다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강원과 전북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7.95$, $prob=0.0001$). 그러나 연도별로 보면,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은 지역은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별로 볼 때, 경기와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이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4.4〉 지역별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의 차이분석

(단위: 만원)

구분	2005	2007	2008	2012	2013	2015
전국	1,627.0	1,918.4	1,848.8	1,845.1	2,037.7	2,257.0
경기	2,487.8 ^a	2,906.9 ^a	2,473.9 ^a	2,473.9 ^a	2,639.9 ^a	2,794.5 ^a
강원	1,308.4 ^{cd}	1,883.0 ^{bcd}	1,981.5 ^{bc}	1,983.8 ^{bc}	2,097.1 ^b	2,579.4 ^{bc}
충북	1,658.0 ^{bc}	1,977.8 ^{bc}	1,862.7 ^{cd}	2,079.6 ^b	2,058.0 ^b	2,066.1 ^d
충남	1,756.7 ^b	2,258.7 ^b	2,254.7 ^{ab}	1,944.2 ^{bc}	1,949.9 ^b	2,129.4 ^d
전북	1,402.5 ^{cd}	1,664.0 ^{cd}	1,679.0 ^{cde}	1,500.1 ^d	1,801.2 ^b	2,278.3 ^{cd}
전남	1,325.2 ^{cd}	1,607.4 ^{cd}	1,549.4 ^{de}	1,485.4 ^d	1,893.3 ^b	1,887.2 ^d
경북	1,290.3 ^d	1,456.5 ^d	1,395.0 ^e	1,614.4 ^{cd}	1,704.6 ^b	2,016.5 ^d
경남	1,430.1 ^{bcd}	1,650.9 ^{cd}	1,575.6 ^{de}	1,726.8 ^{bcd}	1,890.5 ^b	2,126.4 ^d
제주	2,490.4 ^a	2,287.8 ^b	2,017.5 ^{bc}	2,491.0 ^a	2,740.2 ^a	3,185.2 ^a
F값	19.57	13.43	12.27	10.44	7.19	7.95
prob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2. 농업기반 농가소득 결정요인의 변화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는 농가소득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토지면적, 기계기구자산, 사육가축 자산 등의 농업자산과 전업/겸업, 주업/부업, 연령과 성별, 영농형태, 농업공적보조금, 농업피해보상금, 사업외소득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에서는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의 일반특성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전국 차원

우선 토지면적을 살펴보면, 2005년의 토지면적은 4,251.6㎡로 가장 낮았으나, 2008년 12,231.1㎡로 가장 높아졌고, 다시 2013년 토지면적이 낮아져 2015년에는 10,753.8㎡인 것으로 나타났다($F=179.79$, $\text{prob}=0.001$). 최근 10년간 농가가 보유한 토지면적은 9차 패널인 2008년과 2012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차 패널이 많고, 8차 패널의 토지면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계기구자산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1,186.7만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487.2만원, 그리고 2013년에는 1,838.7만원으로 증가하였다($F=37.12$, $\text{prob}=0.0001$). 따라서 8차 패널에 비해서 9차 패널이, 그리고 9차 패널에 비해서 10차 패널의 기계기구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10차 패널 중 2015년에는 기계기구자산이 1,621.7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육가축자산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969.5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8년에 688.1만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사육가축자산이 다소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다($F=2.69$, $\text{prob}=0.0197$). 2010년과 2011년 사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농가의 사육가축자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육가축자산은 8차 패널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4.5〉 전국 농업기반 농가소득 결정요인의 평균

(단위: m², 만원)

구분	2005	2007	2008	2012	2013	2015	F값	prob
토지면적	4,251.6 ^f	4,449.4 ^f	12,231.1 ^f	11,991.0 ^f	11,021.8 ^g	10,753.8 ^g	179.79	0.0001
기계기구 자산	1,186.7 ^d	1,236.6 ^d	1,487.2 ^e	1,498.1 ^e	1,838.7 ^f	1,621.7 ^b	37.12	0.0001
사육가축 자산	969.5 ^a	930.2 ^{ab}	688.1 ^c	688.6 ^c	734.4 ^{bc}	852.2 ^{abc}	2.69	0.0197
농업 공적보조금	104.7 ^c	109.5 ^c	104.8 ^c	138.6 ^b	146.4 ^b	166.4 ^a	16.78	0.0001
농업 피해보상금	11.3 ^{bc}	58.2 ^a	52.0 ^a	51.4 ^a	7.0 ^c	34.4 ^{ab}	6.41	0.0001
사업외소득	735.3 ^d	813.8 ^d	845.3 ^c	961.9 ^b	1,152.3 ^a	1,120.6 ^a	32.61	0.0001

넷째, 전업/겸업 형태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전업의 비중이 49.3%였으나, 2012년에는 전업의 비중이 42.0%까지 낮아졌다. 그 이후 다시 증가와 감소의 경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전업의 비중은 지속적 감소를 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chi^2=63.2451$, prob=0.0001).

다섯째, 주업/부업 형태를 살펴보면, 2005년에는 전문농가의 비중이 33.8%였으나, 2008년에는 30.6%까지 낮아졌으며, 그 이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농가의 비중과는 반대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chi^2=44.2225$, prob=0.0001). 반면 부업농가와 자급농가의 비중은 연도별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여섯째, 연령을 살펴보면, 2005년 이후 40대와 50대의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70대 이상의 농가는 지속적으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39세 이하와 60대 농가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chi^2=534.773$, prob=0.0001). 따라서 농업인력의 신규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농가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일곱째, 성별은 2015년 농가경제조사에서 처음 제공되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 농가의 89.6%는 남성이 경영주이고, 여성이 경영주인 경우는 불과 10.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가경영주는 주로 남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 전국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의 빈도

(단위: 호, %)

구분		전체	2005	2007	2008	2012	2013	2015	χ^2 (prob)
전체		16,433 (100.0)	3,048 (100.0)	3,121 (100.0)	2,643 (100.0)	2,674 (100.0)	2,347 (100.0)	26,00 (100.0)	-
전업전업전업	전업	7,716 (47.0)	1,503 (49.3)	14,78 (47.4)	1,167 (44.2)	1,124 (42.0)	1,215 (51.8)	1,229 (47.3)	63.2451 (0.0001)
	겸업	8,717 (53.1)	1,545 (50.7)	1,643 (52.6)	1,476 (55.5)	1,550 (48.2)	1,132 (52.7)	1,371 (53.0)	
주요업종	전문	5557 (33.8)	1061 (34.8)	1074 (34.4)	810 (30.6)	894 (33.4)	840 (35.8)	878 (33.8)	44.2225 (0.0001)
	일반	5453 (33.2)	1037 (34.2)	1037 (33.2)	926 (35.0)	856 (32.0)	749 (31.9)	848 (32.6)	
	부업	4256 (25.9)	790 (25.9)	797 (25.5)	713 (27.0)	719 (26.9)	575 (24.5)	662 (25.5)	
	자금	1167 (7.1)	160 (5.2)	213 (6.8)	194 (7.3)	205 (7.7)	183 (7.8)	212 (8.2)	
연령	39 이하	152 (0.9)	41 (1.3)	26 (0.8)	43 (1.6)	18 (0.7)	15 (0.6)	9 (0.3)	534.873 (0.0001)
	40 대	1,418 (8.6)	419 (13.7)	319 (10.2)	268 (10.1)	142 (5.3)	144 (6.1)	126 (4.8)	
	50 대	3,525 (21.5)	754 (24.7)	734 (23.5)	604 (22.9)	511 (19.1)	494 (21.0)	428 (16.5)	
	60 대	5,458 (33.2)	1,045 (34.3)	1,010 (32.4)	925 (35.0)	820 (30.7)	780 (33.2)	878 (33.8)	
	70 이상	5,880 (35.8)	789 (25.9)	1,032 (33.1)	803 (30.4)	1,183 (44.2)	914 (38.9)	1,159 (44.6)	
성별	남자	2,330 (89.6)	0 (0.0)	0 (0.0)	0 (0.0)	0 (0.0)	0 (0.0)	2,330 (89.6)	-
	여자	270 (10.4)	0 (0.0)	0 (0.0)	0 (0.0)	0 (0.0)	0 (0.0)	270 (10.4)	
주요업종	논벼	3,938 (24.0)	889 (29.2)	877 (28.1)	703 (26.6)	515 (19.3)	443 (18.9)	511 (19.7)	440.667 (0.0001)
	과수	1,594 (9.7)	264 (8.7)	279 (8.9)	266 (10.1)	268 (10.0)	248 (10.6)	269 (10.3)	
	채소	3,506 (21.3)	572 (18.8)	644 (20.6)	474 (17.9)	687 (25.7)	552 (23.5)	577 (22.2)	
	특작	420 (2.6)	85 (2.8)	69 (2.2)	107 (4.0)	43 (1.6)	53 (2.3)	63 (2.4)	
	화훼	277 (1.7)	30 (1.0)	34 (1.1)	54 (2.0)	50 (1.9)	52 (2.2)	57 (2.2)	
	전작	553 (3.4)	104 (3.4)	87 (2.8)	61 (2.3)	86 (3.2)	117 (5.0)	98 (3.8)	
	축산	1326 (8.1)	267 (8.8)	241 (7.7)	153 (5.8)	160 (6.0)	238 (10.1)	267 (10.3)	
	기타	241 (1.5)	20 (0.7)	19 (0.6)	32 (1.2)	75 (2.8)	53 (2.3)	42 (1.6)	
	2종 겸업	4,578 (27.9)	817 (26.8)	871 (27.9)	793 (30.0)	790 (29.5)	591 (25.2)	716 (27.5)	

여덟째, 영농형태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논벼농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과수농가와 채소농가, 그리고 축산농가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특작농가와 화훼농가, 그리고 전작농가는 연도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440.667$, prob=0.0001).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논벼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가가 채소와 과수, 축산으로 작물을 전환한다고 할 수 있다.

아홉째, 농업공적보조금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104.7만원이었으나, 2012년에 138.6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166.4만원까지 증대하였다($F=16.78$, prob=0.0001). 따라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농업공적보조금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2년 이후 농업공적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열 번째, 농업피해보상금을 살펴보면, 각 연도별로 일정한 규칙성을 갖지 않고 연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41$, prob=0.0001). 이는 농업피해보상금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을 피해보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열한 번째, 사업외소득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735.3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에는 1,120.6만원에 이르게 된다($F=32.61$, prob=0.0001). 따라서 지난 10년간 농가의 근로소득 및 자본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충남 차원

지금까지는 전국적 차원에서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에 대한 일반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충남에서는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들이 어떤 변화를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토지면적을 살펴보면, 2005년의 충남의 토지면적은 4,036.0㎡로 가장 낮았으나, 2015년에는 13,647.5㎡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2008년 이후 충남 농가의 토지면적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F=40.23$, prob=0.001). 따라서 충남의 농가들은 전국 평균보다 많은 토지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토지면적이 2008년 이후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기계기구자산을 살펴보면, 2015년 1,464.9만원으로 전국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전국 농가의 기계기구자산이 증가한 반면, 충남의 경우 기계기구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96$, prob=0.0813). 따라서 최근 10년간 충남의 농가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4.7〉 충남 농업기반 농가소득 결정요인의 평균

(단위: m², 만원)

구분	2005	2007	2008	2012	2013	2015	F값	prob
토지면적	3,997.3 ^a	4,036.0 ^a	13,097.7 ^a	12,495.7 ^a	12,813.2 ^a	13,647.5 ^a	40.23	0.0001
기계기구 자산	1,222.9	1,280.7	1,664.7	1,331.4	1,479.5	1,464.9	1.96	0.0813
사육가축 자산	1,445.6	1,152.3	725.8	893.9	604.8	716.7	1.42	0.2156
농업 공적보조금	135.4	136.3	123.3	130.0	126.9	128.3	0.14	0.9817
농업 피해보상금	1.2	53.3	167.4	20.4	3.8	18.2	1.74	0.1219
사업외소득	740.0 ^a	865.8 ^{ab}	980.8 ^a	1,052.2 ^a	1,072.6 ^a	988.2 ^a	2.61	0.0232

셋째, 사육가축자산을 살펴보면, 기계기구자산과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사육가축자산은 716.7만원인데, 이 또한 최근 10년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42$, $prob=0.2156$).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011년 구제역에 따른 사육가축자산 규모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충남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충남의 사육가축이 소보다는 돼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 전업/겸업 형태를 살펴보면, 2005년 전업의 비중은 48.6%이었으나, 2015년에는 전업의 비중이 44.5%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chi^2=11.1689$, $prob=0.0481$). 따라서 전국적으로 볼 때, 전업농가가 다시 증가하는 형상과 달리 충남은 전업농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주업/부업 형태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전문농가, 이란농가, 부업농가, 그리고 자급농가의 분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hi^2=15.9823$, $prob=0.03832$). 이는 전국적으로 전문농가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여섯째, 연령을 살펴보면, 전국적인 현상과 동일하게 40대와 50대의 농가는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반면, 70대 이상의 고령농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39세 이하와 60대 농가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6.9949$, $\text{prob}=0.0001$). 따라서 충남 역시 농가 고령화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곱째,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충남 농가의 89.0%는 남성이고, 여성이 경영주인 경우는 11.0%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농가경영주의 성별 분포와 유사한 수준이다.

여덟째, 영농형태를 살펴보면, 2005년 이후 논벼농가는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논벼농가가 감소하는 현상과는 사뭇 차이가 있는 부문이다($\chi^2=136.183$, $\text{prob}=0.0001$). 충남에서 최근 10년간 증가하는 분야는 채소농가 뿐이고, 그 외 작물의 경우는 그 비중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종겸업농가의 비중이 충남에서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홉째, 농업공적보조금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136.3만원이었고, 2015년에는 128.3만원으로 나타났다($F=0.14$, $\text{prob}=0.9817$). 따라서 최근 10년간 충남의 농업공적보조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충남의 농업공적보조금은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실정이다.

열 번째, 농업피해보상금을 살펴보면, 각 연도별로 규칙성을 갖지 않는 것은 전국적 현상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충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F=1.74$, $\text{prob}=0.1219$). 이는 충남의 경우 농업피해보상금이 너무 소액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열한 번째, 사업외소득을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2005년에는 740.0만원에서 시작하여 2013년 1,072.6만원까지 증대되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충남의 사업외소득은 2007년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기 못한($F=2.61$, $\text{prob}=0.0232$). 따라서 충남은 2007년 이후 사업외소득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사업외소득이 동 기간 중에 지속적인 증가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표 4.8〉 충남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의 빈도

(단위: 호, %)

구분		전체	2005	2007	2008	2012	2013	2015	χ^2 (prob)
전체		1,933 (100.0)	348 (100.0)	364 (100.0)	318 (100.0)	317 (100.0)	278 (100.0)	308 (100.0)	-
전업전업지	전업	895 (46.3)	169 (48.6)	157 (43.1)	154 (48.4)	131 (41.3)	147 (52.9)	137 (44.5)	11.1689 (0.0481)
	겸업	1,038 (53.7)	179 (51.4)	207 (56.9)	164 (51.6)	186 (58.7)	131 (47.1)	171 (55.5)	
주업과부업	전문	636 (32.9)	116 (33.3)	117 (32.1)	102 (32.1)	96 (30.3)	102 (36.7)	103 (33.4)	15.9823 (0.3832)
	일반	636 (32.9)	107 (30.7)	103 (28.3)	115 (36.2)	107 (33.8)	95 (34.2)	109 (35.4)	
	부업	563 (29.1)	105 (30.2)	124 (34.1)	82 (25.8)	100 (31.5)	69 (24.8)	83 (26.9)	
	자금	98 (5.1)	20 (5.7)	20 (5.5)	19 (6.0)	14 (4.4)	12 (4.3)	13 (4.2)	
연령	39 이하	12 (0.6)	2 (0.6)	1 (0.3)	4 (1.3)	2 (0.6)	3 (1.1)	0 (0.0)	66.9949 (0.0001)
	40 대	150 (7.8)	42 (12.1)	32 (8.8)	27 (8.5)	8 (2.5)	20 (7.2)	21 (6.8)	
	50 대	405 (21.0)	90 (25.9)	79 (21.7)	71 (22.3)	59 (18.6)	60 (21.6)	46 (14.9)	
	60 대	659 (34.1)	120 (34.5)	122 (33.5)	123 (38.7)	103 (32.5)	80 (28.8)	111 (36.0)	
	70 이상	707 (36.6)	94 (27.0)	130 (35.7)	93 (29.2)	145 (45.7)	115 (41.4)	130 (42.2)	
성별	남자	274 (89.0)	0 (0.0)	0 (0.0)	0 (0.0)	0 (0.0)	0 (0.0)	274 (89.0)	-
	여자	34 (11.0)	0 (0.0)	0 (0.0)	0 (0.0)	0 (0.0)	0 (0.0)	34 (11.0)	
종업형태	논벼	541 (28.0)	116 (33.3)	111 (30.5)	99 (31.1)	68 (21.5)	66 (23.7)	81 (26.3)	136.183 (0.0001)
	과수	101 (5.2)	20 (5.7)	18 (4.9)	18 (5.7)	16 (5.0)	13 (4.7)	16 (5.2)	
	채소	391 (20.2)	55 (15.8)	61 (16.8)	58 (18.2)	86 (27.1)	66 (23.7)	65 (21.1)	
	특작	67 (3.5)	12 (3.4)	9 (2.5)	24 (7.5)	8 (2.5)	7 (2.5)	7 (2.3)	
	화훼	24 (1.2)	0 (0.0)	0 (0.0)	5 (1.6)	5 (1.6)	7 (2.5)	7 (2.3)	
	전작	47 (2.4)	3 (0.9)	9 (2.5)	4 (1.3)	8 (2.5)	14 (5.0)	9 (2.9)	
	축산	162 (8.4)	30 (8.6)	28 (7.7)	15 (4.7)	21 (6.6)	35 (12.6)	33 (10.7)	
	기타	25 (1.3)	0 (0.0)	0 (0.0)	2 (0.6)	4 (1.3)	12 (4.3)	7 (2.3)	
	2종겸업	575 (29.7)	112 (32.2)	128 (35.2)	93 (29.2)	101 (31.9)	58 (20.9)	83 (26.9)	

3.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분석

1) 전국 차원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국 모형1의 경우 주업/부업형태 중 전문농가($e=1525.017$, $t=5.76$), 일반농가($e=558.448$, $t=3.43$)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농형태 중 과수농가($e=556.785$, $t=3.50$), 채소농가($e=249.756$, $t=2.57$), 특작농가($e=1557.671$, $t=4.57$), 축산농가($e=1120.494$, $t=5.98$), 2종겸업농가($e=488.066$, $t=2.14$)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외소득($e=0.142$, $t=2.20$)이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농업자산, 전업/겸업, 연령, 성별, 농업공적보조금, 농업피해보상금 등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국 모형2의 경우에서는 주업/부업형태 중 전문농가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일하게 추정되었지만, 영농형태와 농업피해보상금 및 사업외소득이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상이하였다. 우선 영농형태에서는 과수농가, 특작농가, 화훼농가, 축산농가, 기타농가, 2종겸업농가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국 모형1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농업피해보상금이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반대로 전국 모형1에서 유의미했던 사업외소득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전국 모형3의 경우에는 전국 모형2의 추정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주업/부업 형태 중 전문농가와 일반농가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농형태 중 과수농가, 채소농가, 축산농가, 2종겸업농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이 모형에서는 농업피해보상금이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국가모형2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던 사업외소득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전국에서는 전업/부업형태 중 전문농가와 부업농가이고, 영농형태가 과수, 채소, 축산을 중심으로 하며, 농업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농가일수록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농업자산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우리나라의 농가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농가의 고령화는 지금 당장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향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농업공적보조금과 사업외소득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농업공적보조금이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외소득을 향상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4.9〉 전국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

구분		전국 모형1	전국 모형2	전국 모형3
		2005년과 2007년	2008년과 2012년	2013년과 2015년
농업 자산	토지면적	0.028 (1.03)	0.000 (0.02)	0.014 (1.08)
	기계기구자산	0.035 (0.42)	0.017 (0.12)	0.064 (1.00)
	사육가축자산	-0.135 (-0.82)	0.088 (0.50)	0.103 (0.96)
전업/ 겸업	전업농가	-43.175 (-0.40)	207.348 (1.28)	290.598 (1.34)
주업/ 부업	전문농가	1525.017 (5.76)	1868.723 (7.05)	1864.184 (4.21)
	일반농가	558.448 (3.43)	541.682 (2.75)	924.665 (2.34)
	부업농가	-118.653 (-1.08)	-242.279 (-1.33)	388.684 (1.59)
연령	30대 미만	-20.969 (-0.03)	-3078.030 (-1.44)	-133.373 (-0.14)
	40대	373.504 (1.23)	-126.029 (-0.26)	938.629 (1.20)
	50대	83.857 (0.46)	153.331 (0.63)	62.065 (0.15)
	60대	-41.508 (-0.55)	123.468 (1.06)	-177.696 (-0.76)
성별	남자	-	-	196.990 (0.84)
연도		-74.547 (-1.37)	72.686 (0.96)	36.759 (0.17)

〈표 4.9〉 전국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계속)

구분		전국 모형1	전국 모형2	전국 모형3
		2005년과 2007년	2008년과 2012년	2013년과 2015년
영농 형태	과수농가	556.785 (3.50)	810.026 (3.39)	973.559 (3.52)
	채소농가	249.756 (2.57)	153.348 (1.28)	472.569 (2.31)
	특작농가	1557.671 (4.57)	1006.769 (2.67)	614.251 (1.93)
	화훼농가	2844.397 (1.93)	1561.835 (3.00)	413.382 (0.40)
	전작농가	196.953 (1.14)	253.816 (1.35)	369.894 (1.78)
	축산농가	1120.494 (5.98)	1774.249 (3.69)	2238.728 (5.20)
	기타농가	589.751 (0.95)	1413.608 (2.02)	932.423 (1.22)
	2종겸업	488.066 (2.14)	1054.732 (3.88)	1247.608 (3.53)
농업공적보조금		-0.233 (-0.65)	0.084 (0.34)	0.506 (0.90)
농업피해보상금		-0.524 (-2.10)	-0.589 (-8.20)	0.378 (2.48)
사업외소득		0.142 (2.20)	-0.001 (-0.02)	0.050 (0.40)
상수항		281.340 (0.83)	-260.374 (-0.52)	-1031.895 (-1.82)
OBS		6169	5317	4947
r^2		0.0584	0.1006	0.0583
No. of group		3337	3199	2955

2) 충남 차원

충남지역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전국의 분석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충남 모형1에 의하면, 영농형태 중 특작농가($e=4067.160$, $t=2.77$)만이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보조금($e=-1.624$, $t=-3.01$)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농업자산, 전업/겸업형태, 주업/부업형태, 연령, 성별, 농업피해보상금, 사업외소득 등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남 모형2의 경우에는 전국 모형에서 나타나지 않은 농업자산 중 기계기구자산($e=0.326$, $t=2.24$)과 사육가축자산($e=0.565$, $t=4.75$)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업/부업 형태 중 전문농가($e=3057.543$, $t=2.99$)와 영농형태 중 2종겸업농가($e=2498.429$, $t=2.23$)이 (+)의 영향을 미치는 나타났으나, 농업피해보상금($e=-5.269$, $t=3.00$)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충남 모형3의 경우에는 주업/부업 중 전문농가만이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농형태 중 화훼농가는 (-)의 영향력을, 그리고 기타농가는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농업자산, 연령, 농업보조금, 농업피해보상금, 사업외소득 등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에서는 전문농가이고, 기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만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국의 추정결과와 사뭇 차이가 있다. 즉 충남에서는 일반농가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과수, 채소, 축산 등의 작물이 농업기반 농가소득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피해보상금도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충남지역의 특화농업 중 하나인 화훼로 인해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10〉 충남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

구분		충남 모형1	충남 모형2	충남 모형3
		2005년과 2007년	2008년과 2012년	2013년과 2015년
농업 자산	토지면적	-0.028 (-0.40)	0.000 (0.01)	-0.045 (-1.61)
	기계기구자산	-0.063 (-0.49)	0.326 (2.24)	-0.041 (-0.94)
	사육가축자산	0.135 (1.17)	0.565 (4.75)	0.791 (1.72)
전업/ 겸업	전업농가	164.844 (0.56)	908.947 (1.98)	114.351 (0.46)
주업/ 부업	전문농가	1374.880 (1.56)	3057.543 (2.99)	1109.923 (2.24)
	일반농가	517.896 (0.78)	1645.115 (1.87)	414.416 (1.39)
	부업농가	-114.864 (-0.37)	-527.183 (-0.97)	252.266 (0.50)
연령	30대 미만	309.248 (0.19)	1826.458 (0.91)	-727.056 (-0.38)
	40대	-871.933 (-1.11)	-190.780 (-0.22)	1007.178 (0.57)
	50대	-508.946 (-1.18)	263.566 (0.39)	-583.417 (-0.65)
	60대	-98.304 (-0.44)	165.303 (0.57)	-315.106 (-0.45)
성별	남자	-	-	-752.112 (-0.62)
연도		-336.855 (-1.97)	183.858 (0.92)	951.827 (0.77)
영농 형태	과수농가	-400.902 (-0.55)	1299.387 (1.41)	-36.534 (-0.09)
	채소농가	386.846 (1.74)	-225.974 (-0.68)	126.321 (0.38)
	특작농가	4067.160 (2.77)	280.769 (0.26)	1515.982 (1.94)
	화훼농가	-	536.554 (0.43)	-11942.560 (-19.15)
	전작농가	311.643 (0.87)	792.575 (1.14)	57.816 (0.17)
	축산농가	1791.697 (1.91)	1130.522 (1.12)	67.564 (0.13)
	기타농가	-	5744.543 (1.77)	2357.996 (2.36)
	2종겸업	836.761 (1.07)	2498.429 (2.23)	319.184 (0.56)

〈표 4.10〉 충남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계속)

구분	충남 모형1	충남 모형 2	충남 모형3
	2005년과 2007년	2008년과 2012년	2013년과 2015년
농업공적보조금	-1.624 (-3.01)	0.097 (0.11)	-0.299 (-0.14)
농업피해보상금	2.573 (1.28)	-5.269 (-3.00)	-10.686 (-1.78)
사업외소득	0.111 (0.95)	-0.094 (-0.48)	-0.071 (-0.44)
상수항	641.914 (0.75)	-2018.486 (-1.83)	918.938 (1.17)
OBS	712	635	586
r^2	0.2619	0.5032	0.3385
No. of group	390	366	360

4. 정책적 제언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업자산의 토지면적, 기계기구자산, 사육가축자산은 전국과 충남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아직 규모화가 되지 못해서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농업자산에 대한 규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전업/겸업의 여부는 농가소득의 유의미한 결정요인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국과 충남에서 동일한 결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30일 이상 농사 외의 일에 종사하는가를 가지고 가구를 구분하는 전업농가와 겸업농가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주업/부업에서는 전국 차원에서는 전문농가와 일반농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충남 차원에서는 전문농가만 유의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충남의 경우 3ha 미만이거나 농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중소농의 경우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충남의 경우 일반농가가 3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일반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정정책이 집중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연령과 성별은 전국과 충남 차원에서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4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에서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기적으로 고령화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40대를 중심으로 한 농업인력 확보가 시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섯째, 영농형태는 전국과 충남의 추정결과가 다소 상이하였다. 전국 차원에서 볼 때, 과수, 채소, 축산, 2종겸업 농가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충남에서는 오직 기타농가만이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화훼농가는 오히려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충남의 경우 전국과 상이하게 논벼농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다 전략적으로 과수, 채소 등으로 재배품종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농가소득에 (-)의 영향을 미치는 화훼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농업공적보조금은 전국과 충남 차원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업공적보조금은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거나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의 농업공적보조금이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농업피해보상금은 전국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충남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업피해보상금은 자연재해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확실한 소득이기 때문에 농업기반 농가소득과 관련성을 확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을 적극적인 영농의지로 본다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재해보험가입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덟째, 사업외소득은 전국과 충남에서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업외소득의 증가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측면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농정에서 사업외소득을 향상시키는 위한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의 비중이 더 크다. 이런 현실적 조건을 고려할 때, 사업외소득은 농촌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농가는 농업이라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농촌사회에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농정정책의 중심이나 농정정책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1〉 분석결과의 종합

구분		전국 차원	충남 차원
농업 자산	토지면적		
	기계기구자산		
	사육가축자산		
전업/겸업	전업농가		
주업/부업	전문농가	+	+
	일반농가	+	
	부업농가		
연령	30대 미만		
	40대		
	50대		
	60대		
성별	남자		
영농형태	과수농가	+	
	채소농가	+	
	특작농가		
	화훼농가		-
	전작농가		
	축산농가	+	
	기타농가		+
	2종겸업	+	
농업공적보조금			
농업피해보상금		+	
사업외소득			

제5장 결론 및 한계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이 충남과 전국으로 비교할 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충남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확대시키는 전략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반면 충남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은 상승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절대규모가 1,500만원 이하로 매우 소규모가 본질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최근 10년간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9개 지역의 농업기반 농가소득은 지난 10년간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의 경우 제주와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제주와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유사한 수준이다.

셋째,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충남은 전국과 달리 일반농가와 영농형태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은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반농가의 육성과 더불어 채소와 과수농가를 육성해야 하고, 화훼농가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토지, 기계기구, 사육가축 등의 자산규모를 확대해 규모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고령화가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확보와 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적 관점에서는 농업공적보조금이 농업기반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집행방식의 전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지원 및 농촌사회에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시행될 필요성이 있다.

2.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농가소득을 농업기반 농가소득과 농업비기반 농가소득으로 구분하고,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가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지역의 농가소득을 주제로 설정하였다는 측면에서도 큰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농가특성과 영농특성에 한정되어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농업자산과 농업공적보조금, 농업피해보상금, 그리고 사업외소득 등을 새로운 결정요인으로 주목했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경제조사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추이와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농가경제조사 자료의 패널이 상이한 관계로 10년 간의 데이터를 통합하지 못하고, 구분해 별도로 추정했다는 측면에서 연구방법론적 한계가 제기된다. 그리고 농가경제조사의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사변수 이외의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도 있다. 예컨대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노동투입시간 등의 변수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농가경제조사 자료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제약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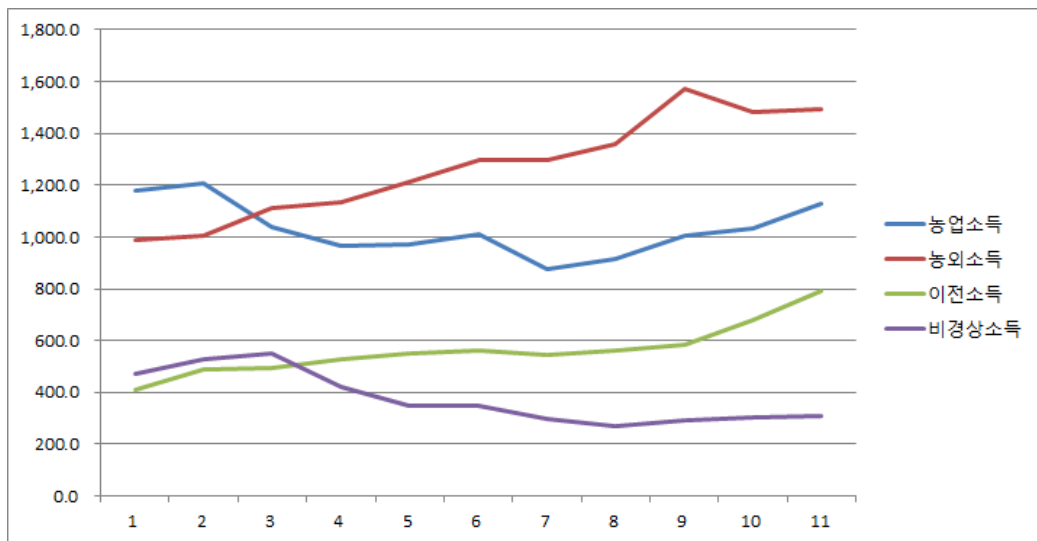
따라서 향후 농가경제조사와 농업총조사의 자료를 통합하게 될 경우, 농업기반 농가소득 결정요인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농가경제조사 자료에 의존하지 말고, 표본조사를 통해서 실제 충남의 영농구조가 어떠한지,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농업기반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요인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성적인 접근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 록

〈부표 1〉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변화

(단위: 만원)

연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2005	3,050.3	1,181.5	988.4	407.8	472.5
2006	3,230.4	1,209.2	1,003.7	488.6	528.9
2007	3,196.7	1,040.6	1,109.7	495.9	550.6
2008	3,052.1	965.3	1,135.2	528.9	422.6
2009	3,081.4	969.8	1,212.8	548.1	350.7
2010	3,212.1	1,009.8	1,294.6	561.0	346.7
2011	3,014.8	875.3	1,294.9	545.3	299.3
2012	3,103.1	912.7	1,358.6	561.4	270.5
2013	3,452.4	1,003.5	1,570.5	584.4	294.0
2014	3,495.0	1,030.3	1,479.9	681.9	302.9
2015	3,721.5	1,125.7	1,493.9	790.6	3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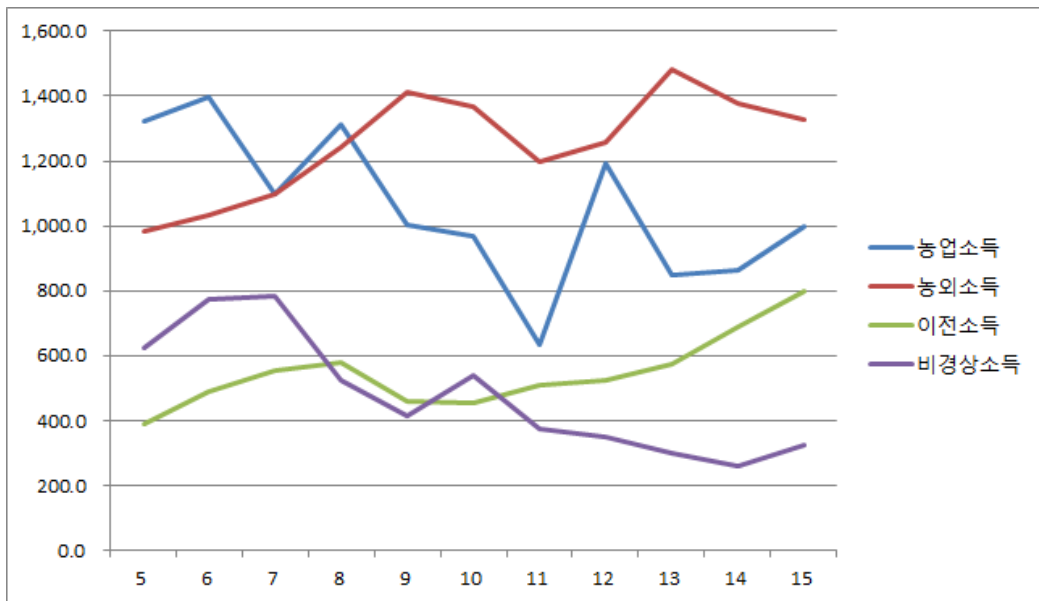


[부그림 1]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변화

〈부표 2〉 충남의 농가소득 변화

(단위: 만원)

연도	농가소득	농가소득 구성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2005	3,321.5	1,323.9	982.0	391.8	623.8
2006	3,689.7	1,395.1	1,030.6	488.6	775.3
2007	3,537.7	1,098.2	1,100.0	556.0	783.6
2008	3,660.8	1,314.0	1,240.2	581.2	525.3
2009	3,286.4	1,003.8	1,410.7	458.1	413.9
2010	3,322.0	967.2	1,364.9	453.2	536.8
2011	2,709.3	631.5	1,195.5	509.7	372.6
2012	3,321.7	1,190.2	1,259.9	524.4	347.2
2013	3,203.8	848.6	1,481.7	572.9	300.6
2014	3,193.3	862.5	1,379.2	689.6	262.1
2015	3,448.0	998.4	1,326.5	796.5	326.6



[부그림 2] 충남의 농가소득 변화

〈부표 3〉 2005년의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단위: 만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기반	농업 비기반
		농업	농업외	이전	비경상		
전체	3,050.3	1,181.5	988.4	407.8	472.5	1,423.3	1,627.0
서울	4,090.5	1,144.4	2,255.2	334.3	356.5	1,944.8	2,145.7
부산	3,777.6	-64.0	1,289.3	141.4	2,410.9	388.6	3,388.9
대구	3,657.7	631.9	1,321.1	371.3	1,333.4	1,569.3	2,088.4
인천	2,720.4	989.6	800.0	486.0	444.7	1,101.2	1,619.2
광주	2,737.9	1,367.1	602.2	200.6	568.0	1,367.5	1,370.5
대전	2,792.3	113.9	1,812.2	484.9	381.3	318.5	2,473.8
울산	3,907.4	824.8	1,970.4	476.9	635.2	1,360.4	2,547.0
경기	3,882.7	1,023.7	1,838.6	417.9	602.6	1,394.9	2,487.8
강원	2,652.3	1,120.0	820.1	440.3	271.9	1,343.9	1,308.4
충북	2,940.9	1,056.8	1,022.2	479.1	382.9	1,282.9	1,658.0
충남	3,321.5	1,323.9	982.0	391.8	623.8	1,564.8	1,756.7
전북	2,823.9	1,271.8	679.4	417.2	455.4	1,421.3	1,402.5
전남	2,705.4	1,171.4	673.6	393.4	466.9	1,380.3	1,325.2
경북	2,781.8	1,324.3	699.5	300.7	457.3	1,491.4	1,290.3
경남	2,707.9	1,034.9	922.2	537.9	213.0	1,277.8	1,430.1
제주	4,481.9	1,623.8	1,849.5	326.6	682.0	1,991.5	2,490.4
충남순위	3	3	4	7	2	2	3
최고값	4,481.9	1,623.8	1,849.5	537.9	682.0	1,991.5	2,490.4
최저값	2,652.3	1,023.7	673.6	300.7	213.0	1,277.8	1,290.3

〈부표 4〉 2006년의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단위: 만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기반	농업 비기반
		농업	농업외	이전	비경상		
전체	3,230.4	1,209.2	1,003.7	488.6	528.9	1,394.8	1,835.6
서울	4,420.0	508.8	2,423.0	616.2	872.1	1,234.2	3,185.8
부산	3,411.1	2,187.2	993.9	105.3	124.8	2,462.5	948.6
대구	2,836.5	683.3	1,390.1	472.3	290.8	1,756.8	1,079.7
인천	3,426.6	1,387.7	1,134.3	585.1	319.5	1,506.3	1,920.3
광주	2,383.7	1,310.8	472.9	277.6	322.4	1,293.6	1,090.1
대전	2,714.0	134.8	1,856.2	348.1	375.0	395.0	2,319.0
울산	4,664.7	988.9	2,443.6	643.2	589.0	1,504.7	3,160.0
경기	4,201.8	1,288.2	1,861.3	482.6	569.7	1,667.1	2,534.7
강원	2,764.0	962.4	807.9	563.4	430.3	1,097.2	1,666.8
충북	3,030.2	1,017.5	987.0	523.8	502.0	1,158.5	1,871.7
충남	3,689.7	1,395.1	1,030.6	488.6	775.3	1,536.4	2,153.3
전북	3,003.2	1,222.8	675.0	562.0	543.4	1,227.2	1,776.0
전남	2,797.4	1,153.2	710.7	491.4	442.1	1,263.3	1,534.2
경북	2,942.2	1,292.2	652.7	373.4	623.9	1,420.4	1,521.8
경남	2,968.0	1,117.7	982.3	577.8	290.1	1,371.0	1,597.0
제주	4,204.9	1,469.7	1,865.7	283.6	585.9	1,862.9	2,341.9
충남순위	3	2	3	6	1	3	3
최고값	4,204.9	1,469.7	1,865.7	577.8	775.3	1,862.9	2,534.7
최저값	2,764.0	962.4	652.7	283.6	290.1	1,097.2	1,521.8

〈부표 5〉 2007년의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단위: 만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기반	농업 비기반
		농업	농업외	이전	비경상		
전체	3,196.7	1,040.6	1,109.7	495.9	550.6	1,278.3	1,918.4
서울	2,589.6	-188.1	2,096.4	542.4	138.9	483.8	2,105.8
부산	4,807.3	2,822.8	1,517.7	157.2	309.6	3,298.9	1,508.3
대구	3,278.3	741.2	1,563.8	464.1	509.3	1,917.2	1,361.1
인천	3,191.9	1,115.1	985.8	493.3	597.8	1,151.7	2,040.3
광주	2,424.2	1,262.3	621.0	264.5	276.5	1,247.4	1,176.8
대전	2,548.2	-21.9	1,663.6	92.4	814.1	271.5	2,276.8
울산	4,792.1	955.8	2,439.7	536.6	859.9	1,379.3	3,412.8
경기	4,312.7	962.1	2,087.8	499.0	763.8	1,405.8	2,906.9
강원	3,032.3	820.0	1,085.7	713.6	413.0	1,149.3	1,883.0
충북	3,153.7	1,018.5	1,067.0	489.4	578.9	1,176.0	1,977.8
충남	3,537.7	1,098.2	1,100.0	556.0	783.6	1,279.0	2,258.7
전북	2,951.1	1,166.5	771.8	508.2	504.6	1,287.1	1,664.0
전남	2,754.5	1,020.8	732.9	484.2	516.5	1,147.1	1,607.4
경북	2,726.9	1,157.8	732.9	352.9	483.3	1,270.4	1,456.5
경남	2,909.3	901.1	1,143.9	548.5	315.8	1,258.5	1,650.9
제주	4,118.9	1,484.7	1,673.3	405.7	555.2	1,831.1	2,287.8
충남순위	3	4	4	2	1	4	3
최고값	4,312.7	1,484.7	2,087.8	713.6	783.6	1,831.1	2,906.9
최저값	2,726.9	820.0	732.9	352.9	315.8	1,147.1	1,456.5

〈부표 6〉 2008년의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단위: 만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기반	농업 비기반
		농업	농업외	이전	비경상		
전체	3,052.1	965.3	1,135.2	528.9	422.6	1,203.3	1,848.8
서울	2,322.6	-21.5	1,574.1	672.0	98.0	927.3	1,395.3
부산	3,185.7	150.8	1,967.7	556.2	511.1	490.0	2,695.7
대구	3,194.1	448.6	1,624.6	526.3	594.7	1,127.8	2,066.4
인천	2,213.6	972.5	420.2	523.7	297.2	858.4	1,355.2
광주	2,361.8	454.6	1,133.0	156.0	618.2	483.1	1,878.7
대전	2,031.3	395.3	861.1	363.1	411.7	416.4	1,615.0
울산	4,152.5	386.0	3,147.6	299.5	319.3	316.3	3,836.2
경기	3,693.1	844.8	1,908.1	562.6	377.6	1,219.3	2,473.9
강원	3,282.0	1,072.8	1,099.3	767.4	342.6	1,300.5	1,981.5
충북	2,890.9	712.0	1,312.0	536.3	330.6	1,028.2	1,862.7
충남	3,660.8	1,314.0	1,240.2	581.2	525.3	1,406.1	2,254.7
전북	2,895.1	1,084.7	811.0	497.7	501.7	1,216.1	1,679.0
전남	2,634.9	859.0	773.4	538.6	463.9	1,085.6	1,549.4
경북	2,789.2	1,102.3	886.6	369.4	431.0	1,394.3	1,395.0
경남	2,518.8	685.9	904.9	624.7	303.4	943.2	1,575.6
제주	3,767.2	1,520.4	1,536.3	286.1	424.4	1,749.8	2,017.5
충남순위	3	2	4	3	1	2	2
최고값	3,767.2	1,520.4	1,908.1	767.4	525.3	1,749.8	2,473.9
최저값	2,518.8	685.9	773.4	286.1	303.4	943.2	1,395.0

〈부표 7〉 2009년의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단위: 만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기반	농업 비기반
		농업	농업외	이전	비경상		
전체	3,081.4	969.8	1,212.8	548.1	350.7	1,282.6	1,798.8
서울	5,897.7	3,006.9	2,074.1	766.7	50.1	4,097.2	1,800.5
부산	3,065.9	-15.4	1,720.4	651.5	709.4	59.6	3,006.4
대구	3,491.6	610.9	2,188.2	380.9	311.6	1,468.7	2,022.9
인천	1,982.3	814.6	456.9	304.9	405.9	850.5	1,131.8
광주	2,272.0	851.9	718.3	162.5	539.2	916.6	1,355.3
대전	2,082.9	-128.2	1,403.0	445.9	362.2	129.8	1,953.0
울산	3,924.5	393.9	2,688.6	393.6	448.3	545.2	3,379.3
경기	3,426.2	710.7	1,827.2	601.8	286.5	1,080.7	2,345.5
강원	3,412.6	1,134.2	1,317.1	636.8	324.6	1,456.4	1,956.1
충북	3,187.6	1,023.7	1,317.0	582.6	264.2	1,343.9	1,843.7
충남	3,286.4	1,003.8	1,410.7	458.1	413.9	1,407.0	1,879.4
전북	3,064.1	1,112.1	993.3	536.9	421.7	1,397.2	1,666.9
전남	2,521.6	830.4	760.1	562.3	368.7	1,067.1	1,454.5
경북	3,129.6	1,249.8	1,020.4	528.9	330.5	1,590.5	1,539.0
경남	2,817.3	920.4	975.8	606.1	315.0	1,163.0	1,654.3
제주	3,503.7	1,042.7	1,517.8	592.0	351.2	1,237.0	2,266.7
충남순위	4	6	3	9	2	3	4
최고값	3,503.7	1,249.8	1,827.2	636.8	421.7	1,590.5	2,345.5
최저값	2,521.6	710.7	760.1	458.1	264.2	1,067.1	1,454.5

〈부표 8〉 2010년의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단위: 만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기반	농업 비기반
		농업	농업외	이전	비경상		
전체	3,212.1	1,009.8	1,294.6	561.0	346.7	1,260.1	1,952.0
서울	3,154.3	253.5	1,911.7	696.8	292.2	615.9	2,538.4
부산	2,948.9	913.4	1,338.5	588.3	108.7	1,206.0	1,742.9
대구	3,955.7	855.8	2,378.7	296.4	424.7	1,801.0	2,154.7
인천	2,005.8	573.9	693.8	478.7	259.4	621.8	1,384.0
광주	3,803.3	1,742.7	1,317.5	173.2	569.9	1,801.0	2,002.3
대전	2,695.0	647.7	1,348.9	440.6	257.8	717.8	1,977.2
울산	4,900.4	576.8	2,940.7	363.0	1,020.0	927.3	3,973.1
경기	3,835.0	779.0	2,091.1	582.9	382.0	1,104.3	2,730.7
강원	3,507.7	1,356.7	1,319.2	562.3	269.5	1,660.5	1,847.2
충북	2,865.0	701.8	1,225.0	613.2	325.0	974.7	1,890.3
충남	3,322.0	967.2	1,364.9	453.2	536.8	1,238.5	2,083.5
전북	3,110.5	1,329.2	927.5	612.7	241.1	1,482.0	1,628.6
전남	2,763.5	888.0	930.8	593.7	351.0	1,101.6	1,661.9
경북	2,988.8	1,054.8	1,046.9	531.6	355.5	1,350.2	1,638.6
경남	3,044.2	972.6	1,155.0	715.5	201.1	1,052.4	1,991.8
제주	4,108.9	1,796.8	1,659.7	409.6	242.8	2,077.9	2,031.0
충남순위	4	6	3	8	1	5	2
최고값	4,108.9	1,796.8	2,091.1	715.5	536.8	2,077.9	2,730.7
최저값	2,763.5	701.8	927.5	409.6	201.1	974.7	1,628.6

〈부표 9〉 2011년의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단위: 만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기반	농업 비기반
		농업	농업외	이전	비경상		
전체	3,014.8	875.3	1,294.9	545.3	299.3	1,162.1	1,852.7
서울	2,857.9	-49.9	1,764.9	465.9	677.0	30.2	2,827.6
부산	2,724.1	407.6	1,704.9	483.2	128.4	1,379.9	1,344.1
대구	3,712.4	739.9	2,005.8	329.5	637.1	1,750.2	1,962.2
인천	2,167.3	739.2	754.6	519.7	153.8	795.1	1,372.2
광주	3,113.4	1,205.4	1,072.6	236.1	599.2	1,263.9	1,849.5
대전	3,492.8	1,886.1	762.0	516.5	328.2	1,964.8	1,528.0
울산	3,365.1	635.2	2,080.1	422.3	227.5	688.5	2,676.6
경기	3,312.9	283.3	2,095.7	578.3	355.5	764.3	2,548.6
강원	3,286.8	1,090.7	1,256.0	570.0	370.1	1,428.7	1,858.2
충북	2,855.9	512.3	1,534.9	532.0	276.7	760.1	2,095.8
충남	2,709.3	631.5	1,195.5	509.7	372.6	718.1	1,991.3
전북	2,963.9	1,296.0	994.9	533.4	139.6	1,442.1	1,521.8
전남	3,042.9	1,148.3	959.3	575.2	360.0	1,408.8	1,634.1
경북	2,658.7	913.5	934.5	547.8	262.9	1,182.3	1,476.4
경남	3,320.8	1,199.4	1,386.4	588.1	146.9	1,588.0	1,732.8
제주	3,637.5	1,126.6	1,528.5	511.3	471.1	1,369.2	2,268.3
충남순위	8	7	6	9	2	9	4
최고값	3,637.5	1,296.0	2,095.7	588.1	471.1	1,588.0	2,548.6
최저값	2,658.7	283.3	934.5	509.7	139.6	718.1	1,476.4

〈부표 10〉 2012년의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단위: 만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기반	농업 비기반
		농업	농업외	이전	비경상		
전체	3,103.1	912.7	1,358.6	561.4	270.5	1,258.0	1,845.1
서울	1,612.6	-461.0	1,748.6	309.0	16.1	-297.8	1,910.4
부산	4,223.9	1,484.0	2,029.3	469.5	241.1	2,879.0	1,344.8
대구	3,474.6	500.0	2,195.1	353.7	425.7	1,667.0	1,807.5
인천	2,321.9	781.2	855.6	552.3	132.7	1,030.7	1,291.2
광주	1,821.3	331.0	1,022.4	217.1	250.7	450.4	1,370.9
대전	786.8	-468.4	580.0	483.6	191.6	-393.1	1,179.9
울산	3,439.6	303.6	2,243.3	345.5	547.3	698.3	2,741.3
경기	3,813.2	711.0	2,249.7	518.5	333.9	1,339.3	2,473.9
강원	3,069.3	687.7	1,442.9	633.4	305.3	1,085.5	1,983.8
충북	2,999.3	614.7	1,539.3	551.8	293.5	919.7	2,079.6
충남	3,321.7	1,190.2	1,259.9	524.4	347.2	1,377.5	1,944.2
전북	2,622.6	865.3	981.5	651.7	124.0	1,122.5	1,500.1
전남	2,622.9	861.5	983.7	532.3	245.3	1,137.4	1,485.4
경북	3,173.9	1,345.8	973.5	595.2	259.4	1,559.5	1,614.4
경남	2,774.8	631.3	1,387.9	573.9	181.7	1,048.0	1,726.8
제주	3,916.7	1,200.6	1,654.1	660.0	402.1	1,425.7	2,491.0
충남순위	3	3	6	8	2	3	5
최고값	3,916.7	1,345.8	2,249.7	660.0	402.1	1,559.5	2,491.0
최저값	2,622.6	614.7	973.5	518.5	124.0	919.7	1,485.4

〈부표 11〉 2013년의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단위: 만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기반	농업 비기반
		농업	농업외	이전	비경상		
전체	3,452.4	1,003.5	1,570.5	584.4	294.0	1,414.7	2,037.7
서울	2,219.5	126.2	981.8	842.2	269.3	127.3	2,092.2
부산	5,378.2	1,620.4	2,312.3	1,092.5	353.0	2,481.8	2,896.4
대구	4,463.3	1,935.5	1,663.3	699.5	165.0	2,179.4	2,284.0
인천	4,285.5	847.2	2,729.5	534.0	174.8	1,498.4	2,787.1
광주	1,750.8	343.9	330.0	656.0	420.9	347.3	1,403.5
대전	2,414.5	605.5	875.7	579.9	353.4	693.7	1,720.8
울산	3,860.7	370.1	3,065.3	256.6	168.8	970.4	2,890.3
경기	3,974.8	773.7	2,358.1	522.1	320.9	1,334.9	2,639.9
강원	3,492.1	1,170.1	1,421.3	684.4	216.3	1,395.0	2,097.1
충북	3,541.8	984.4	1,697.3	630.2	229.9	1,483.8	2,058.0
충남	3,203.8	848.6	1,481.7	572.9	300.6	1,253.9	1,949.9
전북	3,086.9	789.2	1,546.0	564.5	187.1	1,285.6	1,801.2
전남	3,385.8	1,066.5	1,350.5	587.3	381.5	1,492.4	1,893.3
경북	3,489.4	1,422.6	1,207.6	567.6	291.6	1,784.8	1,704.6
경남	2,994.6	839.4	1,208.0	615.4	331.7	1,104.1	1,890.5
제주	4,164.0	1,003.7	2,247.8	558.9	353.5	1,423.8	2,740.2
충남순위	7	6	5	5	5	8	5
최고값	4,164.0	1,422.6	2,358.1	684.4	381.5	1,784.8	2,740.2
최저값	2,994.6	773.7	1,207.6	522.1	187.1	1,104.1	1,704.6

〈부표 12〉 2014년의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단위: 만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기반	농업 비기반
		농업	농업외	이전	비경상		
전체	3,495.0	1,030.3	1,479.9	681.9	302.9	1,391.1	2,104.0
서울	2,225.9	333.3	533.3	971.1	388.2	333.6	1,892.2
부산	5,850.8	1,938.6	2,847.6	780.9	283.7	2,735.5	3,115.4
대구	4,534.5	1,680.1	1,872.8	794.5	187.1	1,940.9	2,593.6
인천	4,905.2	885.7	3,286.2	410.1	323.3	1,529.2	3,376.1
광주	889.8	-632.7	538.2	698.4	285.9	-601.7	1,491.5
대전	2,761.3	322.3	666.5	972.7	799.8	441.5	2,319.9
울산	4,595.9	944.9	3,086.8	307.7	256.5	1,948.1	2,647.8
경기	3,882.2	697.4	2,307.3	585.6	292.0	1,143.5	2,738.7
강원	3,621.2	1,138.1	1,382.2	763.4	337.5	1,393.8	2,227.4
충북	3,557.0	947.9	1,566.4	687.6	355.0	1,399.8	2,157.2
충남	3,193.3	862.5	1,379.2	689.6	262.1	1,214.3	1,979.0
전북	3,361.6	974.5	1,384.6	775.5	226.9	1,293.6	2,068.0
전남	3,113.0	988.3	1,217.6	659.3	247.7	1,427.9	1,685.0
경북	3,698.7	1,583.6	1,092.5	686.0	336.6	1,864.6	1,834.1
경남	3,014.7	902.1	1,067.3	705.1	340.3	1,164.9	1,849.9
제주	4,270.0	900.1	2,277.7	693.9	398.3	1,251.0	3,019.0
충남순위	7	8	6	5	7	7	6
최고값	4,270.0	1,583.6	2,307.3	775.5	398.3	1,864.6	3,019.0
최저값	3,014.7	697.4	1,067.3	585.6	226.9	1,143.5	1,685.0

〈부표 13〉 2015년의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단위: 만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기반	농업 비기반
		농업	농업외	이전	비경상		
전체	3,721.5	1,125.7	1,493.9	790.6	311.4	1,464.5	2,257.0
서울	3,715.1	275.9	2,649.1	580.3	209.8	940.1	2,775.0
부산	6,913.0	3,353.2	2,093.0	1,277.0	189.8	4,099.9	2,813.1
대구	3,435.0	1,287.5	1,025.0	850.9	271.6	1,355.1	2,079.9
인천	4,214.6	770.0	2,541.1	524.7	378.8	1,059.9	3,154.7
광주	1,695.0	243.1	377.6	823.9	250.3	265.3	1,429.7
대전	2,122.1	197.7	433.1	1,073.9	417.4	285.5	1,836.6
울산	5,319.0	1,385.0	3,265.1	404.7	264.2	2,486.5	2,832.5
경기	2,979.3	302.7	1,541.3	693.8	441.5	841.3	2,138.0
강원	4,102.5	754.4	2,293.9	719.7	334.4	1,308.0	2,794.5
충북	3,967.3	1,286.7	1,546.0	830.9	303.7	1,387.9	2,579.4
충남	3,658.5	1,257.7	1,339.6	815.2	246.1	1,592.4	2,066.1
전북	3,471.8	1,033.7	1,315.6	801.7	320.8	1,342.7	2,129.0
전남	3,613.0	985.0	1,562.3	802.1	263.6	1,334.7	2,278.3
경북	3,441.0	1,205.3	1,142.1	805.2	288.4	1,553.8	1,887.2
경남	3,822.2	1,547.4	1,204.4	750.4	320.0	1,805.8	2,016.5
제주	3,459.7	1,018.9	1,217.5	873.4	350.0	1,333.3	2,126.4
충남순위	4	3	5	3	9	2	7
최고값	4,102.5	1,547.4	2,293.9	873.4	441.5	1,805.8	2,794.5
최저값	2,979.3	302.7	1,142.1	693.8	246.1	841.3	1,887.2

참 고 문 헌

- 강상목 외(2005), “기술효율, 환경효율, 규모효율과 그 결정요인 분석: 한국농가의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환경경제학회.
- 강혜정 외(2011), “농업교육 참여에 따른 농가소득 증가율 추정”, 농촌경제, 제34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권오상 외(2013a), “농가소득에 있어 이웃효과 추정”, 농촌경제, 제36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권오상 외(2013b),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가소득 결정요인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4권 제2호, 한국농업경제학회.
- 권용대 외(2006), “시설채소농가의 소득변동 영향요인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한국축산경영학회/농업정책학회.
- 김규섭 외(2014), “농가소득의 불평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지역학회.
- 김미복(2016),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용(2004a), “농가소득 불균등도 변화 추이의 경영주연령별·경기규모별 요인 분해 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1권 제4호, 한국축산경영학회/농업정책학회.
- 김성용(2004b), “농가소득 불균등의 변화 추이와 소득원천별 분해”, 농업경제연구, 제45권 제4호, 한국농업경제학회.
- 김영식(1979), “농사소득성장과 농업구조개선”, 농촌경제, 제2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인숙 외(1990), “농가유형별로 본 농가소득 및 소비지출 구조분석: 88 농가가계부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28권 제3호, 대한가정학회.
- 김장호(1984), “농가유형별 농가소득의 통계분석”, 농촌경제, 제7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재경 외(2011), “농업 R&D 투자의 농가소득 불균등 개선효과”, 농업경제연구, 제52권 제3호, 한국농업경제학회.
- 김태이 외(2012), “공적보조금이 지역내 지역간 농가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3권 제1호, 한국농업경제학회.
- 김형화(1980), “한일 농가소득구조에 대한 비교분석”, 농업경제연구, 제21권, 한국농업경제학회.

문팔용(1978), “농산물 가격정책과 농가소득”, 농촌경제, 제1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선형 외(2015), “농가특성별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소득효과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6권 제4호, 한국농업경제학회.

박중훈 외(2014), “농업의 6차산업화가 농가 및 농업법인의 농업 및 농외소득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제20권 제4호, 한국농촌계획학회.

박준외(2004), “농가소득 불평등도의 요인분해”, 농촌경제, 제27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용도(2006), “구조적 충격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분석: 항상소득가설을 이용하여”, 농업경제연구, 제47권 제3호, 한국농업경제학회.

안동환(2004), “도시근로자의가구와 농가의 소득불평등도 비교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45권 제1호, 한국농업경제학회.

오내원 외(2013), 농가소득의 중장기 실태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영식 외(2013), “농가의 고령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령효과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농촌경제, 제36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관률(2014),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농정연구, 제49호, 농정연구센터.

이명현(2006), “농가 경영주 부부의 농외소득활동 여부에 따른 농업노동공급 패턴의 비교”, 농업경제연구, 제47권 제1호, 한국농업경제학회.

이병기(2000), “한국경제위기 전후 농가소득불균등 변화와 정책과제”, 농업경영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축산경영학회/농업정책학회.

이용기(2007), “직접지불을 통한 쌀 농가 소득지원정책의 효율성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48권 제4호, 한국농업경제학회.

이은우(2006),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격차요인 분석”, 농촌경제, 제29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정환 외(1987), 농가소득의 결정과 분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태호(2000), “농가의 소득과 쌀 재배면적”. 농업경제연구, 제41집 제3호, 한국농업경제학회.

이해림 외(2016), “쌀 관세화 유예와 농가소득 간의 관계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임재환(1992), “농가소득의 구조적 변동과 충남지역의 농외소득개발전략”, 지역개발논총,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임정빈(2014), “2014년 미국 신농업법의 농가소득지원 정책분석”, 한국국제농지, 제26권 제3호,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전지연 외(2016), “논벼·양념채소 농가의 농업소득 변동 요인분석”, 농촌경제, 제39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진화 외(2013), “한국농가의 고령화와 농가소득에의 영향”, 농업경제연구, 제54권 제2호, 한국농업경제학회.

최양부(1978), “농가소득 증대방향에 관한 이론적 검토: 특히 영세소농의 농외소득증대 문제와 관련하여”, 농촌경제, 제1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칠구 외(2013), “친환경 고추 생산농가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0권 제4호, 한국축산경영학회/농업정책학회.

충청남도(2013), 함께하는 3농혁신 농어업·농어촌의 희망입니다(2013년 3농혁신 추진계획).

한국농업경제학회(2008), 한국농업경제학 50년의 회고와 전망, 농민신문사.

황의식 외(2005), “농가 유형별 소득변동 분석”, 농촌경제, 제28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외(2006), “FTA 추진에 따른 농가유형별 소득변동 분석”, 농촌경제, 제29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2004), “소득변동 수준에 의한 농가 분포 분석”, 농촌경제, 제27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재희 외(2016), “농업의 6차산업화 융복합 유형과 농가 소득 증대변화”, 농촌경제, 제39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iketty, T(2004), L'économie des inégalités, La Découverte(토마스 피케티(2014), 불평등 경제, 마로니에북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이관류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전략연구 2017-03 · 충남지역 농업기반 농가소득의 변화와 결정요인분석

글쓴이·이관류

발행자강현수 / 발행처·충남연구원

인쇄·2017년 12월 31일 / 발행·2017년 12월 31일

주소·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041-840-1204(농촌농업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041-840-1129

ISBN·978-89-6124-399-5 03350

<http://www.cni.re.kr>

© 2017.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